

2007년 2월

석사학위논문

#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Propulsion Direct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조선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채예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Propulsion Direct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2007년 2월 23 일

조선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채예

#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에 관한연구

지도교수 박노경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채예

# 채예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6 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5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	3
<b>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고찰</b> .....	5
제1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	5
제2절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	8
1. 자유무역협정의 이익 .....	8
2. 자유무역협정의 손실 .....	11
제3절 주요국별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12
<b>제3장 중국과 한국의 경제현황 및 FTA의 추진현황</b> .....	16
제1절 중국과 한국의 경제현황과 전망 .....	16
1. 중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 .....	16
2. 한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 .....	27
제2절 중국과 한국의 교역현황 .....	33
1. 중국과 한국의 교역구조 현황 .....	33
2.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 현황 .....	36
제3절 한·중 FTA 추진현황 .....	41
1. 중국의 FTA 추진 내용 .....	41
2. 한국의 FTA추진 내용 .....	47

<b>제4장 한·중 FTA 체결의 문제점 및 추진전략</b> .....	51
제1절 한·중 FTA 체결의 문제점 .....	52
1. 경제적 조건의 차이 .....	52
2. 산업발생의 고착화 .....	54
3. 경제체제의 이질성 .....	56
4. 남북한 대결구도 .....	56
5. 한·중 양국간 무역불균형 심화 .....	57
제2절 한·중 FTA 추진전략 .....	58
1. 산업부문별 추진전략 .....	59
2. 정부정책상의 지원전략 .....	71
<b>제5장 결론</b> .....	77
<b>참고문헌</b> .....	81

## 표 목 차

<표 2-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	5
<표 2-2>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	7
<표 2-3>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	8
<표 2-4> 국별-지역별 FTA 체결현황 .....	13
<표 3-1> 중국의 경제지표 .....	17
<표 3-2> 중·미 합의에 따른 중국의 연도별 관세율 인하계획 .....	21
<표 3-3> 국가별·경제 블록별 FDI의 흐름 추이 .....	22
<표 3-4> 세계 15대 교역국 .....	23
<표 3-5> 2000~2020 경제성장 전망 .....	25
<표 3-6> 2000~2020 경제성장 전망 .....	26
<표 3-7> 주요나라의 주요 경제지표 .....	28
<표 3-8> 주요 경쟁국의 수출중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비중 .....	34
<표 3-9> 한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35
<표 3-10> 업종별 대중국 수출의 준도 현황 .....	36
<표 3-11> 한·중 무역방식별 비중 추이 .....	37
<표 3-12> 한국 대중국 10대 수출상품 .....	38
<표 3-13> 연도별 대중투자현황 .....	38
<표 3-14>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중 외자기업의 점유비중 .....	40
<표 3-15> 중국의 FTA 추진 현황 .....	40
<표 3-16> 중국·ASEAN 관세율 인하일정 .....	44
<표 3-17> ASEAN의 FTA 추진 현황 .....	47
<표 3-18>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48
<표 4-1> 한·중의 경제규모 .....	52

## 그 립 목 차

[그림 3-1] GDP, CPI 성장률 추이 .....	18
[그림 3-2] 세계 각국의 수출증가율 순위와 수출액 .....	23
[그림 3-3] 세계 각국의 수출증가율 순위 .....	24
[그림 3-4] 세계 수출시장 한국1위 품목수 .....	31
[그림 3-5]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추이 .....	34
[그림 3-6] 최근 중국의 수입 관세율변화 추이 .....	39
[그림 3-7] 중국과 ASEAN 간의 무역구조 .....	45



# ABSTRACT

## **A Study on the Propulsion Direct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Cai Rui

Advisor: Prof. Park, Ro-Kyung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a Free Trade Agreement (FTA) among Korea and China contributes to the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We first estimate the trade enhancing effect of the FTA of the two countries, and then estimate how this increased trade advances the economic growth. In addition, we explore how the FTA alters the industry structure of trade in each country and thereby influences the growth impact of the FTA.

In contrast to other studi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an FTA, our study relies on the actual data of the past experiences of the existing FTAs. In addition,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three countries' close geographical location, we develop a new methodology that gives

us a more realistic estimate of the trade creation effect of the two-country FTA.

The issu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re quite different. The manufacturing sectors in Korea and China are complementing each other in terms of technological level, with Korea exhibiting a comparative advantage in more technology- and capital intensive production and China possessing a comparative advantage in relatively labor-intensive production. Furthermore, there has been an expansion of intra-industry trade with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order to build an environment for Korea-China FTA, a number of steps need to be taken. These include: an early establishment of a joint study comprising the government, civil experts and enterprises; a consensus building process for the general public; and an exercise of leadership on the basis of the belief that Korea-China FTA will provide a framework of co-prosperity in Northeast Asia.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세계 경제가 다자체제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기구)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면서도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무역 일반 협정)/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를 보면 1990년대 이후 들어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 교역에서 주요 지역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8년 22.5%에서 2005년 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와 같은 지역주의는 역내국가와 역외국가 간에 차별적 대우를 부여하는 배타적 특성으로 인해 GATT/WTO 중심의 다자체제에 배치되는 개념, 즉 다자주의의 걸림돌로 인식되었으나, 1989년 미·캐나다 FTA의 발효를 계기로 과거의 반지역주의를 버리고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 자유무역협정)를 출범시키는 등 세계는 친지역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는 급진적인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과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시도된 국제무역의 확대노력 등이 그 원동력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각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려는 공조의 노력들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FTA가 그 대표적인 협정이라 하겠다. 자유무역협정 단계를 넘어서 관세동맹, 공동 시장, 경제 통합, 그리고 정치적 통합이라는 순서로 협정은 더 구체화 되어간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국가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과 WTO 가입 이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틈새에 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기 위해 한·중 양국의 FTA 움직임과 체결 후에 예상되는 성과들을 알아보기로 하자.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결정되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연내 가입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보다 긴밀히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그 동안 수 차례 제기되었던 양국간 경제블록 필요성은 이제 그 논의가 점차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양국은 세계화와 지역주의 강화라는 세계경제의 양대 주류 속에서 예외지역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경제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도 양국간 경제협력은 적극적인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한중의 교역규모는 세계경제에서 큰 축이 되고 있다.

역내 양국이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체는 WTO 규범과 일치하면서 실행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특혜적 무역블록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과거사로 인한 동북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 역내 경제적 격차의 고착 우려 등으로 양국간 FTA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경제협력체 추진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간에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간 협조를 통해 역내 국가의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는 무역규모가 큰 국가간의 FTA 체결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 출범이후에도 지역주의 성향이 계속적으로 확산 심화되어가고 또한 세계경제가 몇 개의 지역통합으로 재편되어 가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속에서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한·중 FTA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한·중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한·중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논문을 통해서 최근에 개방정책이후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동북아의 주요 국가이자 한국과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엄청난 잠재시장의 수요와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여러 파급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은 한국과 지역적으로도 인접하고, 정서적으로도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투자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 단단한 협력체계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 중국의 무역규모를 파악해보고 한·중간의 무역형태와 특징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으로 한·중간의 -FTA 체결로 인한 효과 분석을 알아보고 FTA추진가능성과 주요쟁점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FTA의 개황과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고 세계 주요국의 지역

화에 따른 FTA 추진동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경제현황, 양국의 경제관계, 한·중 FTA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 FTA 대비 추진 방향과 추진에 따른 문제점들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논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고찰

### 제1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sup>1)</sup>

지역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를 처음으로 분류한 바이너(Viner)의 분류방식에 따르면 다음(<표 2-1>참조)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형태가 있다.

<표2-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지대 (NAFTA, EFTA 등)	-	-	-	-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	-	-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	-
경제공동체 ( EC )				-
완전경제통합 (EU: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C)				

자료: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2002. <http://www.fta.go.kr>

첫째,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둘째,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셋째, 관세동맹에다가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

1) 박인선,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4-11.

시장(Common Market)

넷째,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다섯째,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인 단일시장(Single Market).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이란 경제동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체약국간에 있어서 체약국산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sup>2)</sup> 본 정의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을 규정짓고 있으나, 현재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우에도 상기원칙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약국 각자가 역외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와 무역정책 들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역내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자체가 역외국에는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역외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교역이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체약국들의 후생증진에 따른 신규 역외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에 의해 상쇄되는지 여부가 주요한 관심사이나, 아직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약국들은 역내산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어 원산지 충족기준을 강화하게 되는바, 이로 인해 특혜를 받기 위한 역내투자가 촉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다음(<표 2-2>참조)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 교역자유화 및 투자자유화,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들을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무역협정(Comprehensive FTA)으로 나아가

---

2) GATT 제24조 제8항

3)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고 있다.

<표 2-2>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형태	내용	예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Comprehensive FTA)	전분야의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한 교역자유화를 추진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부문별 자유무역협정 (Sectoral FTA)	협정당사국이 합의한 특정산업이나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	1965년 미국-캐나다간 Auto Pact
기능적 자유무역협정 (Functional FTA)	정부조달, 무역관련 투자 또는 분쟁해결절차 등 협정 당사국간에 있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특정한 제도 등의 개선	1987년 미국-멕시코간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

자료: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90년대 초반에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심화되었던 것은 기존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주의 추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 확산,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정책"으로서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sup>4)</sup>

그러나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다자체제의 실패에 대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4) WTO, Regionalism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WTO Secretariat, 1995. p.1.

추구되어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제2절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 1. 자유무역협정의 이익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외교적인 측면으로 나누고, 경제적 효과는 다음 (<표 2-3>참조)과 같이 다시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표 2-3>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구 분		내 용	효 과	
			가입국	가역국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 효과	역내무역장벽 철폐이후 가입국간 새로 무역이 발생	+	+(간접적)
	무역전환 효과	역내무역장벽 철폐이후 기존 역외국 (저 비용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역내국가 (고비용생산국)로 전환되는 효과	-	-
동태적 효과	시장확대 효과	역내무역장벽 철폐로 시장이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	+	+(간접적)
	경쟁촉진 효과	역내시장 개방에 의한 경쟁압력의 강화 로 생산성 향상 규제완화, 구조개혁, 경쟁증대로 산업구 조 고도화	+	+(간접적)

자료: 박번순,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2.27.

자유무역협정하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역자유화는 단기적으로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이에 관한 이론을 처

음으로 제시한 바이너(Viner 1950)는 이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바이너의 연구는 최종재화에 대한 관세철폐가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두고 전자를 긍정적인 효과로, 후자를 부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 바이너의 이론은 정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단점과 함께 경제통합으로 인해 생산활동의 효율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무역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5)</sup>

‘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역내국들은 비싼 국산재화를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따라서 각 경제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교역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상품의 수입이 저해될 것이고, 이 경우 체약국의 후생수준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을 ‘무역전환효과’라고 부른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철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가인 역외 외국재화 가고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의 재화가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역내산이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관세상의 우위로 인해 역외산 보다는 가격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게 된다.

체약국은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산업에 대해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그 결과 회원국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무

---

5)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상대적인 크시는 산업구조, 경쟁성, 포괄범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경우, 무역전환의 불이익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동태적 효과’라 함은 경제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단기간 내에는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말하는데, 협정의 내용에 따라 동태적 효과가 정태적 효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및 경쟁촉진 요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이 동태적인 측면에서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들의 동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역내시장이 확대되자 역내경제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산업의 경우, 역내시장의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단위당 평균생산비용이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역내재화가 역외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으며, 단기적으로 발생하였던 무역전환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이 증대하게 된다.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관련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는 등 정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시 공식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1994년 12월 멕시코의 제2차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클린턴 미 대통령은 동년 1월부터 발효 중이던 NAFTA의 성공적인 정착과 미주지역경제통합(FTAA)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안정기금

200억 달러를 멕시코에 긴급 지원함으로써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sup>6)</sup>

## 2. 자유무역협정의 손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경제적으로 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소국은 경제적 대국의 무역협정 추구전략에 휩쓸려 주변국(Spoke)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변국은 자유무역협정 중심국의 지역무역협정을 구축하는 데 종속적인 위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경제적으로 소국인 나라는 주변국에 머물게 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내세운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어렵게 된다.<sup>7)</sup>

또한 무역전환효과로 말미암아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역외국에 부과하는 고관세는 역외국의 비교우위상품이 역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아 역내국 주민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회원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하여 완전 도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1965년에 체결된 미국·캐나다 자동차협정에서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

6)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 0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12, pp.46-48.

7) Wonnacott (1996a,b)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주변국은 대등한 입장의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일 경우에 비해 후생 악화가 확실한 반면, 여러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중심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복수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중심국일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합이 이들 여러 Hub-and-Spoke 자유무역협정을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을 만들 경우의 이익보다 낮을 수 있는데 이는 중첩되는 자유무역협정간 발생하는 비효율성 때문이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자유무역이 실시되면 미국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캐나다 자동차업계는 상당부분 위축되고 그 결과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생산 및 고용에서 오히려 성장하였다. 협정체결 전인 1962년에 캐나다는 미국에 1천6백만 달러 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하였으나, 협정체결 후인 1968년에는 24억 달러 어치 수출을 기록하였다.

이는 역내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자동차업계가 캐나다산 부품을 더 많이 수입하여 사용하였고, 캐나다 기업들도 확대된 북미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에는 다소 불안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시장을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협정이행 초기에 시장개방의 폭을 축소하여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특정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를 보완해야 하는데, 자유무역협정에서 자유화 이행기간 중에 허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이러한 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준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이행 초기에는 민감하지 않은 품목 위주로 자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에 따라 손실을 입는 계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sup>8)</sup>

### 제3절. 주요국별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8) 정인교·이경희,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0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pp.27-29.

< 표 2-4 > 국별-지역별 FTA 체결현황

국가	체결 대상 국가
한국	[발 효 중] 칠레 [협상완료] 싱가포르, ASEAN [협 상 중] 일본, 캐나다, 미국, 인도, MERCOSUR*, 멕시코
미국	[발 효 중]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등 6개국 [협상완료] 중남미5개국 모로코 호주 도미니카공화국 [협 상 중] FRAA(新) 중남미5개국, 모로코, 호주, 남아프리카5개국, 도미니카공화국, 바레인
EU	[가 입 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15개국 [발 효 중] 알제리, 안도라, 요르단,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이집트, 에스토니아, 파로, 아일랜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말타, 멕시코, 모로코, 노르웨이, 팔레스타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남아공,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시리아, 튀니지, 터키, 칠레 등 32개국
ASEAN	[발 효 중]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협 상 중] 인도, 일본, 한국, 미국, EU
MERCPSUR	[가 입 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발 효 중] 칠레 [협 상 중] Eu Andean Community 멕시코, 인도 한국 등
중국	[발 효 중] 홍콩, 마카오, ASEAN [협 상 중] 칠레, 호주, 뉴질랜드, GCC**, 파키스탄, 남아공
일본	[발 효 중] 싱가포르 [협상완료] 멕시코, 필리핀 [협 상 중]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발 효 중] NAFTA EU E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 칠레 G3(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올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31개국 [협상완료] 우루과이, 일본 [협 상 중] 싱가포르, FRAA(新) 아르헨티나, MERCOSUR, 한국
칠레	[발 효 중] 캐나다, 멕시코,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EU 미국, 한국 등 30개국
뉴질랜드	[발 효 중] 호주, 싱가포르 등 2개국 [협 상 중] 홍콩 P3(싱가포르 칠레)
싱가포르	[발 효 중] 일본, ASEAN, 뉴질랜드, EFTA, 호주, 미국 등 17개국 [협 상 중] 캐나다, 인도, 요르단, 한국, 멕시코, P3(뉴질랜드, 칠레)
태국	[발 효 중] ASEAN [협상완료] 호주 [협 상 중] 인도, 페루, BIMST-EC(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주: \*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준회원). \*\* 걸프협력회의회 (Gulf Cooperation Council).

자료: 「국별-지역별 FTA 체결현황」 표, 농협중앙회 조사부, 2004.1, 「세

계 FTA 추진현황」, 관세종합상담센터<sup>9)</sup>, 2006.6.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가 작성.

2005년도에는 WTO의 DDA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미국 및 중국 등 주요국들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05년 7월까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180건으로 이 가운데 총 18건의 FTA가 2005년 중에 추가되고 있다. 또한 WTO에 미통보된 FTA 가운데 2005년 중에 새로 발효되거나, 협상이 개시된 FTA도 상당수 존재한다(<표 2-5>참조).

미국은 미주대륙에서의 리더십 유지를 위해 FTAA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전략상의 중요성 및 지역적 다양성의 차원에서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sup>10)</sup>, 태국,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sup>11)</sup>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UAE(United arab Emirates) 및 오만과도 2005년 3월 각각 FTA협상을 개시, 오만과의 FTA는 2005년 10월 타결한다.

캐나다는 FTAA, EFTA, 싱가포르 및 중남미 4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한국과 FTA 협상을 개시한다.

EU는 지난 2004년 5월 중·동유럽 등 10개국을 추가적으로 영입하여 총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05년 현재 MERCOSUR 및 GCC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FTA는 2000년대 들어서 유럽대륙을 넘어서 주요 교역국인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5년 7월에는 한국과의 FTA

---

9)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10) SACU은 1969년 창설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세동맹체로 회원국은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남아공 등 5개국이다.관세청

11)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5개국이 1969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조약조인으로 발족한 지역적 경제통합.



협상을 타결했었다. 또한 2005년 2월 GCC 국가들과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ASEAN 및 MERCOSUR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7월 ASEAN과의 FTA(상품분야)를 발효시켰으며, 2005년 중에 GCC, 호주, 칠레, 파키스탄과 FTA협상을 각각 개시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들에까지 FTA 대상국을 확장시키고 있다. 칠레와의 FTA는 2005년 10월 타결했었다.

일본은 2004년 12월 수립한 「FTA 추진 기본방침」에 토대를 두고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바, 2005년 4월 멕시코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2005년 중에 말레이시아 및 태국과 각각 FTA 협상을 타결함. 또한 2005년 4월 ASEAN과, 7월에는 인도네시아와 FTA협상을 각각 개시하였으며, 칠레, 인도, 호주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의 FTA도 검토 중에 있음.

ASEAN은 아시아의 FTA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2005년 7월 중국과의 FTA(상품분야)를 발효시켰으며, 2005년 2월에는 한국 및 호주·뉴질랜드와 각각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4월에는 일본과 FTA협상을 개시함. 또한 인도와의 FTA는 당초 2006년 1월부터 발효시점을 연기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9월 수립한 「FTA 로드맵」을 토대로 2005년부터 EFTA, 캐나다, ASEAN, 일본 등 20여 개국과 동시에 FTA 협상 또는 협상 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는 EFTA와의 협상을 타결시킴. 또한 멕시코와는 2005년 8월 공동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인도 및 MERCOSUR 와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국가들의 FTA 추진동향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과거에 WTO 등 다자무역체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FTA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소홀히 해왔던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매우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기존에 지역주의에 상대적으로 관

심을 보이지 않아 왔던 한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등과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국가들도 활발한 FTA 체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자국의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무역협정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미국·칠레 FTA, EU·칠레 FTA, EU·멕시코 FTA 및 호주·중국 FTA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상호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이전에 비해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특혜관세 제도에 대한 개도국들의 의존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 제3장 중국과 한국의 경제현황 및 FTA의 추진현황

### 제1절 중국과 한국의 경제현황과 전망

#### 1. 중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

##### 가. 중국의 경제현황

###### (1).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

중국경제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9%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

12) 이준규,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정책자료05-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pp.132-134.

2003년 중국의 명목 GDP는 1조4,100억 달러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이고 2005년의 GDP성장률은 9.8%로 집계되었다. 구매력(PPP) 평가에 의하면 중국 경제의 규모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6조 3,54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이는 전세계의 12.6%에 달하는 것이다. 1인당 명목 GDP는 아직 1,052달러에 불과하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4,900달러에 달한다.

중국이 연안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대외경제관계 역시 크게 확대되어,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3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03년 중국의 무역규모는 8,512억 달러로, 이중 수출은 4,384억 달러이며 수입은 4,128억 달러이다. 2003년 외국인 투자는 535억 달러로 세계 1위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이며, 같은 해 말 외환보유고는 4,033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이다. 2005년 중국의 무역규모는 14,221억 달러로, 이중 수출은 7,620억 달러이며 수입은 6,601억 달러이다. 2005년 외국인 투자는 4,800억 달러이다(<표 3-1>참조).

<표3-1> 중국의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경제성장률(%)	7.1	8.0	7.5	8.0	9.1	7	9.8
경상 수지	211	205	174	354	270	254	383
경상수지/GDP(%)	2.1	1.9	1.5	2.9	1.8	1.5	1.9
상품 수지	360	345	340	442	255	288	330
수 출	1,947	2,491	2,660	3,256	4,384	5,247	7,620
수 입	2,583	2,146	2,321	2,815	4,128	4,959	6,601
직접 투자유입(순)	370	375	374	468	535	700	603
외환보유액	1,577	1,682	2,156	2,911	4,033	4,157	4,800
소비자 물가상승률(%)	-1.4	0.3	0.5	-0.8	1.2	1.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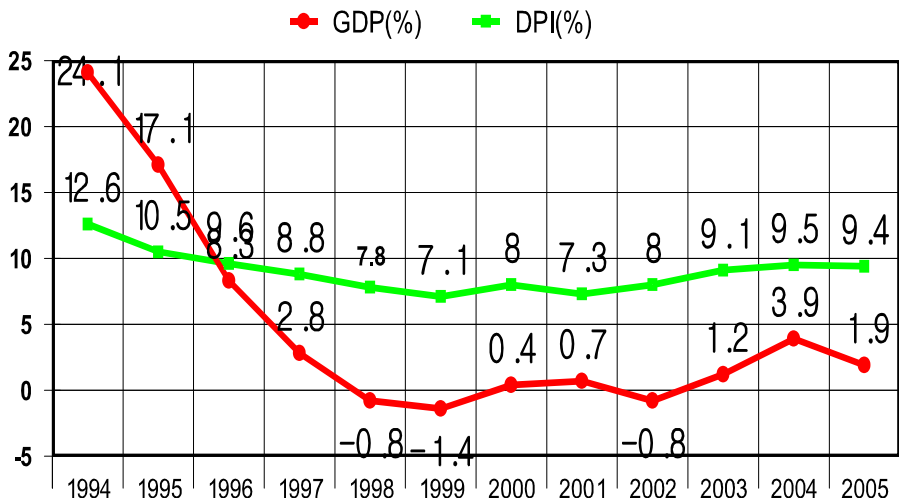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특별조사자료」, 2004.1,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중국 상무부, 2006.3.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가 작성.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함께 중국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표준치의 집계에 의하면 2003년 기준 세계500대 기업중 중국 기업은 13개인데, 이는 1994년의 3개로부터 크게 늘어난 것이다.<sup>13)</sup>

2005년 중국의 9.4%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2003년 9.1%, 2004년 9.5%<sup>14)</sup>의 성장에 이어 9%대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반면, 2005년 1~8월중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부패지수)는 1.9% 성장을 보여 2005년 전체 성장률은 2004년 3.9%대비 약2%p 감소할 전망이다([그림 3-1]참조).

[그림 3-1] GDP, CPI 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005.9. <http://www.mofcom.gov.cn>

13) 김화섭·이석기, "한-중 경제관계의 다양성과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 「정책연구」, 산업연구원, 2004.12, pp.27-28.

14) 2005년 12월20일 리더수이(李德水) 국가통계국 국장은 제1차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2004년 GDP 규모가 현행 환율로 1조9317억 달러(15조9878억 위엔)에 달해 2004년 GDP 증가율을 지난 2월 발표치(13조6880억 위엔)에 비해 16.5%로 늘어났다고 밝힘, 하지만 조정 후 지표를 따를 경우 다른 지표들과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2004년 GDP 규모를 2월 발표 당시의 9.5%로 간주하여 작성한다.

2002년 이후에 경제성장률의 평균 변동 폭은 0.53%로 1981~1990년 3%, 1991년~2001년 1.37% 대비 축소되었다. 1997년 개혁 개방이후, 1981년 ~1990년, 1991년~2001년의 두 번의 경제주기를 경험하였고, 2002년부터 세 번째 경제주기의 상승단계에 돌입하였다.

중국의 저축률과 외환보유고 증가로 인한 거시환경의 조절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2005년 1월~8월 총 저축액은 27.51조 위엔인 반면 총 대출은 18.78조 위엔으로 저축이 8.73조 위엔 많다. 또한 2005년 9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7690.04억 달러 세계 2위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sup>15)</sup>

## (2). 세계의 시장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다국적 기업 등 세계의 주요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목표로 중국에 진출함에 따라 중국은 세계의 주요한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상당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중산층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내수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중산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14%인 1억 7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2억 5천만명에 달한 것으로 되고 있다. 소득향상과 자동차, 주택금융 활성화에 따라 자동차, 주택, 가전 등 고가제품을 중심으로 중산층에 의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 문화에 대한 지출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3년 기준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는 5,500억 달러 정도이며, 매년 300-400억 달러 정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관세·비관세 장벽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접근이 보다 용이해졌다.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WTO 가입 전인 2000년의 16.4%에서 2004년에는

---

15) KOTRA(동북아팀), "중국경제 2005년 5대 사건과 2006년 5대 과제", 「기획조사 05-059」, 2005.12.26, pp.1-2.

11.5%로 낮아졌다. 그리고 2005년까지 수입허가증 및 입찰제한 규정 폐지, 2005년 까지 모든 수입허가제 폐지 등 비관세 장벽도 완화될 것이다.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접근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가공 조립 중심의 수출확대에 따라 원자재,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특히 아시아 공업국들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03년 중국의 총 수입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2.8%에 달한다. 이에 반해 EU와 미국은 각각 12.9%와 8.2%를 점하고 있다. 중국 수입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점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서 점하는 중국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중 수출은 한국 총 수출의 20.5%, 일본 총 수출의 13.6%를 점할 만큼 비중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중 수출이 미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3.9%에 불과하다.<sup>16)</sup>

중국은 2005년까지 WTO가입에 따른 관세인하를 일단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중국의 지방과 세관에 따라 외국상품에 차등관세율이 적용되고, 국경 무역, 소수민족자치지역에 대한 관세특혜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이러한 관세인하는 매우 팔목할만한 것이다.<sup>17)</sup> 중국은 관세인하를 수용하였으나 WTO가입 후에도 내륙과 국경지역에 대한 차별관세의 철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WTO규정이 개도국 및 非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의 경제개발과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관세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근거한다.<sup>18)</sup> 중국이 WTO가입을 통하여 개도국 및 체제이행경제에 부여되는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으려는 것은 당연하다.<sup>19)</sup>

---

16) 김화섭·이석기, "한·중 경제관계의 다양성과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 「정책연구」, 산업연구원, 2004.12, pp.29-30.

17) 중국의 관세인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0년까지 평균관세율을 5% 수준으로 낮출계획이다.

18) GATT 1994는 선진국들에게 개도국 및 체제개혁중인 회원국에 대한 경제 및 기술지원과 각종 특혜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1994.

19) 유자영,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중 FTA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교 중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19.

<표 3-2> 중·미 합의에 따른 중국의 연도별 관세율 인하계획

관세인하 이행완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품목수 (HS 8단위,개)	1,784	939	808	425	936	753	5	0	35	5,685
비율(%)	31.4	16.5	14.2	7.5	16.5	13.2	0.1	0	0.6	100

자료: US-China Business Council, 2005,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중국 상무부, 2006.3.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가 작성.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89-2001년까지 연평균 22%로 증가하였고, 특히 2002년 중에는 연간 527억 달러의 유입으로 전년의 468억 달러(<표 3-3>참조)를 훨씬 능가하였다. 2003년에는 사스(SARS)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세가 둔화되었지만 2003년 중 FDI의 '신규 계약액'은 1,150억 달러로서 전년보다 39%나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건수에 있어 4만 여건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22%가 증가한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각종 규제를 3년 안에 철폐, 세계적 수준의 투자환경조성 등의 약속으로 실제 규제 정비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2006년 이후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3>국가별·경제 블록별 FDI의 흐름 추이

(단위 : 10억 달러)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미 국	144.0	30.0	86.6	95.9	106.0
E U	389.4	374.4	341.8	259.1	445.3
일 본	6.2	9.3	7.5	7.8	9.4
아시아 태평양	106.9	95.1	99.0	155.5	172.7
중 국	46.8	52.7	53.5	56.21	62,24

자료: 『Financial Times』,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set to begin recovery」의 표: 「FDI flows intomajor economics」, 2004.1, 「국가별·경제 FDI」, 중국 상무부, 2006.3.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가 작성.

1980년대 중국의 시장개방 이후, 무역의 급증은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시켜 1980년부터 2002년간에 중국 수출의 세계시장 비중은 1.2%에서 5.2%까지 팽창하였으며 중국 수입의 세계시장 비중은 1.1%에서 4.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의 상품수출의 증가 속도는 연평균 17.3%에 이르고 2005년 중국의 무역액은 전년대비 24.4%가([그림3-3]참조) 증가한14,221억 달러로써, 수출 7,620억 달러(28.4%증가) 및 수입 6,601억 달러(17.6%증가)가 되어 세계 수출랭킹 3위 국가로(<표 3-4>참조) 부상<sup>20)</sup>하여 이러한 추세로 수출이 유지된다면 중국의 수출은 2010<sup>21)</sup>년에는 미국의 수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 『Financial Times』, "The world must Learn to live with a wide-awake China", 2006.11.12.

21) 『Asian Wall Street Journal』, "China Moves Quietly To Push Trade", 2003.9.15.



<표3-4> 세계 15대 교역국

(2005년, 단위 :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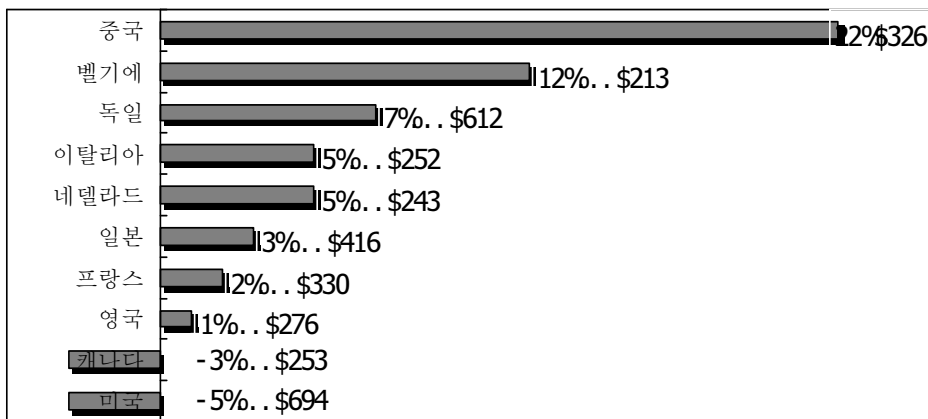
순위	국가명	수 출	수 입	교역규모
1	미 국	807,662	1,505,840	2,313,502
2	독 일	896,925	716,551	1,613,476
<b>3</b>	<b>중 국</b>	<b>762,037</b>	<b>660,122</b>	<b>1,422,159</b>
4	일 본	565,487	454,816	1,020,303
5	프랑스	447,353	463,901	911,254
6	영 국	338,588	453,497	792,085
7	이탈리아	344,707	346,997	691,704
8	네덜란드	354,254	318,109	672,363
9	캐나다	315,858	299,056	614,914
10	벨기에	307,901	285,951	593,852
11	홍 콩	259,284	271,416	530,700
12	한 국	242,809	225,374	468,183
13	스페인	177,009	249,417	426,426
14	멕시코	175,666	183,791	359,457
15	싱가포르	179,458	162,967	342,425

주: 한국 수출순위 12위 (242,809 백만불)

한국 수입순위 13위 (225,374 백만불) ⇒ 총 교역규모 12위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200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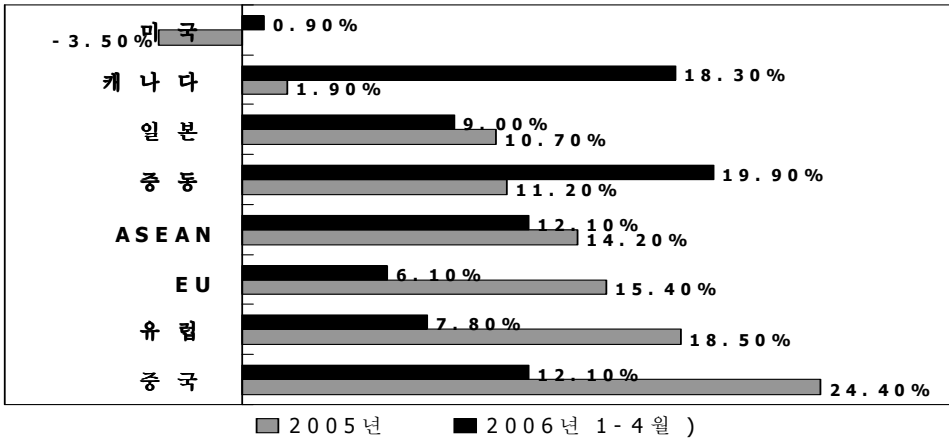
[그림3-2] 세계 각국의 수출증가율 순위와 수출액 (2003년)



자료: 『Asian Wall Street Journal』, 'China Moves Quietly To Push

Trade Goals' 의 그림: 'New Heavyweight in Town' 인용. 2003.9.15

[그림3-3] 세계 각국의 수출증가율 순위 (2005년,2006년1-4월)



주: EU (2004년 5월부터 15국 → 25국으로 변경)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2006년 6월2일)

또한 중국을 구매력 평가기준인 'PPP(Purchasing power of parity, 購買力平價)에 의한 1인당 GDP'를 미국기준(100)으로 보면 그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서 'PPP에 의한 1인당 GDP'에 있어서 중국은 1970년 중반까지는 미국 GDP의 5%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미국의 12.8%로 상승하였고, 2002년에는 미국의 14%까지 빠르게 증가하여 세계2위<sup>22)</sup>가 되었다. 아울러 각국의 국민총소득을 경상가격으로 계산할 때에는 2002년의 경우,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프랑스, 영국 다음에 위치하고 있으나, 특히 프랑스와 영국과의 차는 근소하여, 2005<sup>23)</sup>년 양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3위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24)</sup>

22) 『Financial Times』, 'Comment&Analysis[Asia]: 'The march to Prosperity: why China can maintain its explosive rate of growth for another two decades'', 2004.11.9.

23) 『Financial Times』 "Comment&Analysis: Why Europe was the past, the US is the present and China-dominated Asia the Future fo the global economy", 2003.9.22.

24) 유자영,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중 FTA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대학원

## 나.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

### (1). 중국정부기관 전망

중국 정부는 10차 5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11차 5개년 계획에서도 2010년 1인당 GDP를 2000년의 2배로 제고하는 것을 경제성장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목표가 무난히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2010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2% 이상이면 이 목표가 달성가능하며, 현재로서는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2010년 이후에도 대체로 순조로운 경제성장이 이어지되, 성장률은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의 하락추세는 주로 고령화의 진행,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재정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자본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함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제체제 개혁으로 경쟁·개방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성장의 질적 내용은 더욱 건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 2000~2020 경제성장 전망

(단위:%)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15~2020	2000~2020	2005~2020
GDP		8.7	8.1	7.5	6.8	7.8	7.5
성장 원천	노통력	0.5	0.4	0.2	0.0	0.3	0.2
	자본	6.4	5.6	5.0	4.5	5.4	5.0
	TFP	1.8	2.1	2.3	2.3	2.1	2.2

석사학위논문, 2005, pp.33-35.

자료: 王夢奎 편, 「中國中長期發展의 重要問題: 2006~2020」, 中國發展出版社, 2005, p.32.

<표 3-6> 2000~2020 경제성장 전망

(단위:%)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15~2020	2000~2020	2005~2020
비관 시나리오	8.7	7.5	5.8	4.8	6.7	6.0
기준 시나리오	8.7	8.1	7.5	6.8	7.8	7.5
낙관 시나리오	8.7	8.5	8.2	7.7	8.3	8.1

자료: 王夢奎 편, 「中國中長期發展의 重要問題: 2006~2020」, 中國發展出版社, 2005, p32.

하지만, 그 경우에도 2010년까지 7%대의 성장이 가능하고, 2010년 이후에도 5~6%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요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우수한 실적이다.<sup>25)</sup>

## (2). 중국경제의 세계경제에의 역할 및 전망

중국경제가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되지만 2020년까지 상대적인 성장추세를 지속한다면 세계경제에서의 중국경제의 역할은 현재보다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의 증가를 이끌어 가는 주요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지속과 그에 따른 1인당 GDP의 증가 등에 따라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미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진출 동기가 종래의 생산코스트의 절감으로부터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25) 이문형·정만태·김석진,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5.12, pp.122-124.

최근 중국 기업이 IBM 의 PC부문을 인수한 것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듯이 중국 기업들이 서서히 세계 경제에서의 주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수년내 본격화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 자본의 유치국으로서의 중국뿐만 아니라 자본 수출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본격화될 것이다.

다만 중국의 2003~2004년의 투자과잉이 세계의 원자재 파동을 초래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로부터의 원자재, 부품, 에너지의 수입을 통한 생산 및 수출확대라는 형태로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패턴이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 역시 지속될 것이다.<sup>26)</sup>

## 2. 한국의 경제현황과 전망

2005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7930억달러(840조)로 세계 10위이며, 외환보유액은 2104억달러로 세계 4위이다. 괄목할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의 직접투자액(FDI)은 1100억달러 정도이며, 간접투자액(주식투자)은 시가총액 대비 40%가 넘는 2500억달러 정도이다.

지난해 7930억달러의 GDP를 산출해낸 전산업의 수는 2004년 현재 모두 319만개이다. 그런데 GDP 대비 음식점, 주점, 음료료소매 등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4.9%나 된다. 미국이 7.2%, 영국 11.7%, 프랑스 8.7%, 일본 16.3%과 비교해 매우 높다. 자영업의 비율이 높으면 연금이나 보험 등 공적비용이 높아진다. 소득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한국의 4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의 자영업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현실은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또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1인당

---

26) 김화섭·이석기, "한·중 경제관계의 다양성과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 「정책연구」, 산업연구원, 2004.12, pp.54-55.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의 비율이 낮는데, 한국은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의 개선이 절실하다. 그것은 경기의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2006년 3월말을 기준으로 가계빚은 528조 7672억원이다. 가구당 3천 3백 49만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가구당 소득이 5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계빚은 소득 대비 65%에 해당한다. 1인당 GDP가 한국의 2.6배인 일본의 경우, 가구당 빚이 4200만원 정도로 한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가계빚은 정체 내지 감소하는데 반해서 한국의 가계빚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기인한다.

<표 3-7> 주요나라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괄호 참조)

	2001	2002	2003	2004	2005
미 국					
- GDP					
성장율(%)	0.8	1.9	3.0	4.4	3.5
- 1인당					
GDP(달러)	35,491	36,386	37,805	39,898	42,090
- 실업율(%)	4.8	5.8	6.0	5.5	5.1
-	△3,857	△4,739	△5,307	△6,659	△8,050
경상수지(억달러)					
일 본					
- GDP					
성장율(%)	0.2	△0.3	1.4	2.7	2.7
- 1인당	32,757	31,220	33,678	36,184	-
GDP(미달러)	5.0	5.4	5.2	4.7	4.4
- 실업율(%)	106,52	141,397	157,668	144,343	180,479
- 경상수지(억엔)	4				
영 국					
- GDP	2.3	1.8	2.2	3.1	1.8
성장율(%)	24,246	26,413	30,140	35,505	-

- 1인당 GDP(미달러)	3.2	3.1	3.0		
- 실업율(%)	△22,39	△17,61	△18,73	2.7	2.8
- 경상수지(백만파운드)	1	5	9	△25,682	-
Euro 지역					
- GDP 성장율(%)	1.6	0.9	0.5	2.0	1.3
- 1인당 GDP(달러)	21,971	23,996	29,538	28,596	-
- 실업율(%)	7.8	8.3	8.7	8.8	8.6
- 경상수지(억유로)	△109	577	218	423	288
중 국					
- GDP 성장율(%)	7.5	8.3	9.3	9.5	9.9
- 1인당 GDP(달러)	921	989	1,089	1,227	1,740
- 경상수지(억달러)	174	354	459	690	584.6
한국					
- GDP 성장율(%)	3.8	7.0	3.1	4.6	4.0
- 1인당 GDP(달러)	10,160	11,499	12,720	14,162	16,291
- 경상수지(억달러)	80.33	53.94	119.50	276.13	160.03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해외지표), 2005.6.13. 중국 상무부, 2006.3.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가 작성.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국내 부동산 가격을 크게 상승시켰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GDP의 3배에 해당하는 2500조원 정도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GDP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

동산 버블은 이미 버블이라고 말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2500조원이면 캐나다를 사고도 멕시코를 덤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도를 두 번 이상 살 수도 있는 돈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2500조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530조도 안되는 가계 빚은 크게 문제 될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GDP 대비 60%가 넘는 우리의 가계빚은 일본이 GDP 대비 30% 내외인 점에 비추어 위험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상승만 하면 기대심리로 인해 사람들은 대출을 늘려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져 가계빚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사회비용의 증가이다. 2500조의 부동산 위에서 840조의 GDP를 생산하는 국가는 840조의 부동산 위에서 840조의 GDP를 생산하는 국가에 비해 사회적으로 투자비용이 높고 생산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언제든 부도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사회비용은 높고 생산성이 낮으면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 남지도 않는 장사에 부도 위험도 높다면 투자를 회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은 직접투자 1100억달러와 간접투자 2500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3600억달러나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잔액비율은 세계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13%에 그칠 뿐이다. 반면에 간접투자(주식투자)의 경우 OECD 평균 23%에 크게 웃도는 41%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장설립형의 투자비중이 2001년 80%대에서 2005년 20%대로 낮아지고 있다. 산업별 투자에서도 제조업의 투자비중은 2001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투자행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투자가 세계 평균에도 크게 못미친다는 것은 투자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감소추세이다. 반면에 간접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자본회수의



용이성에 무게를 둔 전략일 것이다. 따라서 세계 평균에 비추어 한국의 간접투자액 전체에서 50% 내외는 할머니일 수도 있다. 언제든지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카르푸와 월마트가 매각되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도 매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또한 4월 말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130억달러 가까이 팔아 치웠다. 외국인의 투자회수가 일시적이길 바랄 뿐이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듯 하다.<sup>27)</sup>

[그림 3-4] 세계 수출시장 한국1위 품목수



자료: 서울신문 2006.5.8. <http://www.seoul.co.kr>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유엔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4년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 1위 품목(HS 6단위 기준)은 59개로 2003년보다 3개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 1위 한국제품은 2001년 60개에서 2002년 66개로 늘었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은 섬유 및 의류 20개, 철강 9개, 선박 4개, 가전(냉장냉동고) 1개, 무선통신기기 1개 등이었다. 굴, 인삼도 1위를 달렸다. 2003년까지 1위였던 메모리반도체와 중형자동차는 해외 현지생산이 늘면서 1위자리를 내놓았다.

27) 네이버, "한국경제의 현실", 지식iN, 2006.9.4, pp.2-3.

세계 주요 수출국 중 중국의 점유율 1위 품목수는 2003년 867개로 1년만에 65개 늘어 미국의 729개, 독일의 795개에 앞선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국은 수출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의 갯수로는 홍콩(130개.8위), 인도(89개.12위), 타이완(88개.14위), 인도네시아(82개.15위)등에 뒤진 세계 17위에 불과했다. 독일이 851개로 1위였고 중국이 833개로 뒤를 바짝 쫓았다.

한국이 1위를 차지하는 품목과 2위 제품과의 점유율 격차는 평균 10%이며 격차가 5% 미만으로 1위자리를 위협받는 품목이 29개인 반면 30% 이상인 품목은 4개에 그쳐 수출 제품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경제전망 연구기관인 홍콩 CEIC (Consensus Economics Inc)의 자료를 인용한 '1~4월 아시아 경쟁국 수출입 동향'보고서에서 올해 4월까지 한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증가했지만 주요 아시아 경쟁국가중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최저를 나타냈다고 6일 밝혔다.

무협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출은 4월까지 995억달러를 기록, 지난해 동기대비 11.0% 증가해 일본(4.2%)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싱가포르 (35.0%), 중국 (25.6%),대만(17.6%)등 주요 경쟁국보다는 낮았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이었던 태국(15.6%),인도네시아 (13.2%),홍콩(12.0%)등도 모두 한국보다 수출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수입증가율은 아시아 상위권 수준이어서 한국 무역수지 악화에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이 기간중 지난해보다 수입이 17.5% 늘어나 싱가포르(25.4%),중국(22.2%)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반면,일본과 대만의 수입증가율은 각각 13.1%,8.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수출입과 수입액의 차이인 무역수지는 33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억달러보다 57%나 감소했다.

흑자액 33억 달러는 중국(336억달러)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무역수지 감소율은 전체 조사대상 8개국중 가장 컸다.

상술 자료부터 볼 수 있듯이 무역규모나 국민소득에서 차원이 다른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 무역상황이 아시아국가중 가장 나쁜 셈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리스크 대비책을 시급히 세우고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sup>28)</sup>

## 제2절 중국과 한국의 교역현황

### 1. 중국과 한국의 교역구조 현황

중국의 WTO가입 이후 한국 수출의 중국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중국이 2001년에는 일본과 ASEAN을 추월하고, 2002년에는 EU를, 2003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림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대중 수출/대세계 수출)는 수교 당시인 1992년 3.5%에서 2004년에는 19.6%<sup>29)</sup>로 높아졌으며(<표 3-8>참조), 2005년 1~8월중에는 21.8%로 상승하였다. 한중간 교역규모가 확대되면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sup>30)</sup>과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면에서도 중국경제, 특히 중국의 수출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해 가고 있

28) 류길상, 「뒤틀림질',메이드인 코리아」, 서울신문, 2006.5.8. <http://www.seoul.co.kr>

29) 2004년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중계무역액은 67.4억 달러로, 이를 포함할 경우 한국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는 22.1%에 달함.

30) 한국의 대중국 직접 수출의존도는 중국경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대만의 17.3%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홍콩을 통한 간접수출을 감안할 경우 대만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나아가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의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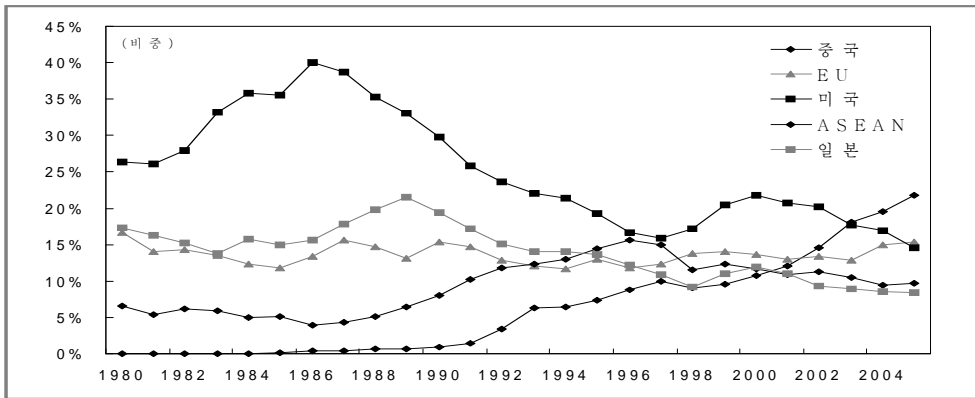
<표 3-8> 주요 경쟁국의 수출중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독일
1992	3.5	1.7	3.5	1.8	13.0	0.9
2004	19.6 (22.1)	4.3 (5.0)	13.1 (16.7)	8.6 (10.0)	17.3 (25.8)	2.9 (3.2)

주:( )안은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 포함한 비중임

자료: 세계무역통계DB(www.kita.net), 대만대륙위원회, 兩岸經濟統計月報 No.151.

[그림 3-5]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DB DB(www.kita.net)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가공단계별<sup>31)</sup>로 살펴보면, 중간재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참조) 2004년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중간재 수출의 28.2%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31) UN의 BEC(Board Economic Categories) 기준에 따라 HS 6단위를 기초로 가공단계별로 분류하였으며, 분류기준은 <부록 1> 참조

있으며, 이 수치는 1992년의 6.2%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부품과 부분품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1992년 0.9%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26.7%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됨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중국내 시장상황과 수출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중 수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3-9>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연도	전품목	1차상품	중간재			최종재			기타
			소계	반제품	부품	소계	자본재	소비재	
1992	3.5	2.1	6.2	9.2	0.9	0.8	1.4	0.4	0.0
1997	10.0	7.4	13.7	19.1	4.6	4.3	5.8	2.9	1.1
2000	10.7	12.3	15.2	21.7	7.7	4.0	4.9	2.9	1.8
2001	12.1	12.0	18.4	23.8	10.6	4.4	5.4	3.1	0.5
2002	14.6	20.8	20.6	25.5	14.5	7.5	10.3	3.7	0.1
2003	18.1	25.3	25.6	28.9	21.8	9.2	12.9	4.1	0.2
2004	19.6	29.8	28.2	29.5	26.7	8.8	12.1	3.8	0.2

주: 대중국 수출액/대세계 수출액

자료: 한국무역협회DB DB(www.kita.net)

업종별로는 피혁 및 모피제품,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정밀기계, 신발업종의 경우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40%를 넘어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목재 및 가구, 플라스틱, 비철금 업종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외에 철강, 일반기계 및 산업기계, 섬유, 가전기기, 컴퓨터 및 부품, 화학섬유는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동차, 반도체, 통신기기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10>참조).<sup>32)</sup>

32) 양평섭, "급속히 커지는 대중국 무역존도", 『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8.17, pp.7-9.

<표 3-10> 업종별 대 중국 수출의 온도 현황

구분	1992	1997	2001	2002	2003	2004
전산업	3.5	10.0	12.1	14.6	18.1	19.6
제조업	3.5	10.0	12.2	14.7	18.2	19.7
식품	0.7	2.9	4.5	6.0	7.3	8.9
음료	0.4	1.8	3.0	4.5	4.4	3.8
담배	0.0	4.2	2.5	2.9	3.3	5.8
섬유	5.0	18.5	21.0	20.4	21.9	22.5
의류 및 기타섬유제품	0.2	2.8	3.5	5.7	6.7	6.9
피혁, 모피	4.6	36.4	42.0	44.4	42.8	42.7
목재, 가구	6.4	28.3	33.8	29.1	28.4	36.4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8.5	19.9	34.7	39.9	42.8	45.9
화학섬유	5.7	17.9	18.1	18.8	20.9	21.7
고무	0.6	4.4	6.2	6.5	7.0	7.3
플라스틱	12.8	29.6	29.2	29.0	29.1	31.5
비금속광물제품	1.8	7.5	20.2	23.5	27.0	20.1
철강	13.5	12.7	18.9	22.4	30.8	27.7
비철금속	7.7	15.9	19.4	23.5	30.8	32.4
금속제품	1.6	6.3	8.5	10.3	14.6	14.7
기계	4.4	16.4	16.1	20.1	26.7	26.1
정밀기계	0.4	5.2	8.3	12.7	26.0	44.5
전기전자	0.8	3.2	7.0	11.8	15.4	17.4
가전기기 및 부품	1.7	8.0	14.4	16.6	18.7	20.4
반도체	0.1	1.0	3.0	5.7	8.8	13.7
컴퓨터 및 부품	0.5	3.2	5.8	11.8	22.0	26.8
통신기기	0.2	1.8	4.5	16.6	13.3	13.6
운송장비	0.4	0.8	0.9	1.3	4.0	5.3
자동차	0.4	0.6	1.4	2.1	6.0	6.6
기타운송장비	0.4	1.1	0.2	0.2	0.3	2.8
신발	0.4	10.2	31.3	37.0	46.4	46.3

자료: 한국무역협회DB DB(<http://www.kita.net>)

## 2.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 현황

한중간 교역은 산업간 경쟁보다 보완관계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국교역 중 산업내 교역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전자, 기계산업의 생산과 수출증가로 한국산 부품 및 기계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對中 수출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내 생산제품은 중저가 제품이 주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에 필요한 외국산 부품조달 시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표 3-11>한·중 무역방식별 비중 추이

(단위: 억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국의 對한국 수출	총액	25.4(100)	155.1(100)	201.0(100)	278.2(100)	351.1(100)
	일반무역	67.6(53.9)	85.6(55.2)	108(54.0)	140.9(50.6)	186.6(53.1)
	가공무역	57.8(46.1)	69.5(44.8)	92.5(46.0)	137.3(49.4)	164.5(46.9)
중국의 對한국 수입	총액	34.0(100)	285.8(100)	431.6(100)	622.5(100)	768.2(100)
	일반무역	99.0(42.3)	129.8(45.4)	206.9(47.9)	274.5(44.0)	314.0(40.9)
	가공무역	249(53.3)	144.4(50.5)	207.4(48.0)	320.3(51.5)	428.9(55.8)

주: ()은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중국 해관총국, (<http://www.mofcom.gov.cn>), 2005.12.

2005년 중의 주요수출품목 중 기계전자제품이 전체의 56%인 4,267.5억 달러(32% 증가)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상품 중 전자부품과 시초산업기계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중국의 긴축정책 실시에 따른 대중 수출증가폭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증가율 시룩이다.

<표 3-12> 한국 대중국 10대 수출상품

(수출) (단위: 백만불, %)

순위	2005년			2006년 1-6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114	117.0	반도체	3,663	6.9
2	컴퓨터	5,072	-5.1	석유제품	2,223	66.8
3	광학기기	3,820	113.3	컴퓨터	2,178	-6.9
4	무선통신기기	3,708	5.8	무선통신기기	1,866	4.3
5	합성수지	3,670	19.8	합성수지	1,863	1.4
6	철강판	3,413	11.0	자동차부품	1,469	22.0
7	석유제품	3,254	23.0	석유화학합성원료	1,398	12.1
8	자동차부품	2,693	55.1	광학기기	1,374	-9.4
9	석유화학합성원료	2,470	36.3	철강판	1,342	-28.7
10	석유화학중간원료	1,588	15.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936	275.5

자료 : KOTI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MTI 3단위), 2006.7,

(<http://www.kita.net>)

(수입) (단위: 백만불, %)

순위	2005년			2006년 1-6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컴퓨터	3,324	42.1	컴퓨터	2,065	28.5
2	의류	2,188	4.5	반도체	1,336	57.2
3	철강판	1,982	106.3	의류	1,180	38.5
4	반도체	1,902	36.7	철강판	1,038	-20.8
5	석탄	1,529	-1.8	전자응용기기	724	25.3
6	전자응용기기	1,450	35.2	석탄	657	-17.4
7	알루미늄	1,097	17.1	알루미늄	630	9.4
8	정밀화학원료	1,012	35.3	무선통신기기	614	93.1
9	정지기기	921	32.7	정밀화학원료	561	14.9
10	선재봉강및철근	826	47.7	선재봉강및철근	527	8.9

자료 : KOTI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MTI 3단위), 2006.7.

(<http://www.kita.net>)

2004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상품 구조를 일차상품, 중간재, 최종재로 나누어 살펴보면, 반제품과 부품 등 중간재가 79.7% 차지한다. 일차상품 0.6%, 중간재 79.7% (반제품 43.9%, 부품 35.8%), 최종재 19.7% (자본재



16.2%, 소비재 3.5%), 한국의 대중국 수입상품 역시 중간재가 52.8%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소비재가 19.8%, 자본재가 18.4%를 차지하고 있다. 일차상품 9.1%, 중간재 52.8% (반제품 34.2%, 부품 18.6%), 최종재 38.1% (자본재 18.4%, 소비재 19.8%). 부품, 반제품, 자본재는 중국에 대해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차상품, 소비재는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 : 일차상품 적자(-24억 달러), 중간재 흑자(240억 달러), 최종재 적자(-14.7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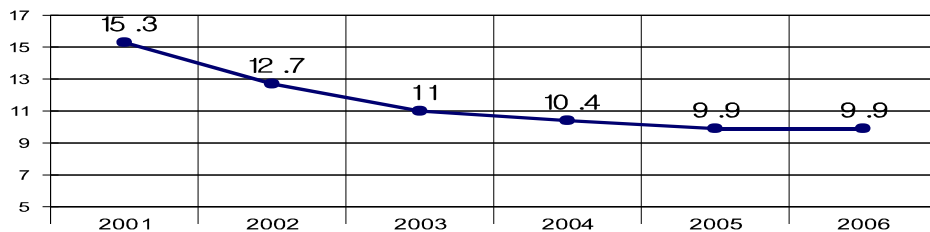
일차상품과 소비재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소비재의 경쟁력은 취약한 반면, 한국시장에서 중국산 소비재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소비재분야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 확대한다.<sup>33)</sup>

한편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수입장벽 완화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지난 2001년 15.3%에서 2005년 9.9%로([그림 3-6]참조) 하락하였으며 IT 제품에 대해서는 ITA협정(정보통신기술협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다.

[그림 3-6] 최근 중국의 수입 관세율변화 추이

(%)



자료: 중국 해관총국, (<http://www.mofcom.gov.cn>), 2006.

33) 중국대사관, 『중한무역관계소개』, 경제상무참사처, 2006.4.4.

<http://kr2.mofcom.gov.cn>

중국은 2002년부터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4년 우리의 對中투자는 약 40%의 증가세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對中투자 감소세는 전년도 큰 폭의 투자증가를 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둔화세로 금년 들어 대중 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표 3-13>연도별 대중투자현황

(단위: 천/천달러)

연도	신고기준		투자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913	999,235	776	710,409
2001	1,137	997,545	1,047	635,520
2002	1,547	2,092,851	1,381	1,019,736
2003	1,838	2,806,990	1,679	1,643,233
2004	2,247	3,680,618	2,150	2,290,059
2005	2,265	3,501,617	2,232	2,581,324
누계	15,510	21,472,589	13,600	13,547,10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5. (<http://www.koreaexim.go.kr>)

수출과 투자 간의 상관관계 존재하며 모기업과 투자법인 간 거래확대로 수출증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중 투자가 내수시장 진출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지 직접투자의수 출창출 기여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확대에 따른 수출유발 효과는 여전히 적지않은 것으로 추정되다.

<표3-14>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중 외자기업의 점유비중

(억 달러, %)

연도	대한수출입		외자기업 수출입		비중(%)	
	수출(A)	수입(B)	수출(C)	수입(D)	수출(C/A)	수입(D/B)
2001	125.4	234.0	61.5	139.6	49.0	59.7
2002	155.1	285.8	75.4	180.9	48.6	63.3
2003	201.0	431.6	102.3	291.8	50.9	67.6
2004	278.1	621.7	154.4	452.3	55.5	72.8

자료: 중국 해관총국, (<http://www.mofcom.gov.cn>), 2005.

화동지역의 개방확대와 경제성장 등 비즈니스 환경개선 요인과 함께 신흥 고업지역으로 넓은 소비시장을 배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는 화동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다.<sup>34)</sup>

### 제3절 중국·한국의 FTA 추진현황

#### 1. 중국의 FTA 추진내용

##### 가. 중국 '신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FTA 정책<sup>35)</sup>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등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武心波(2002)에 따르면, 중국은 서방 주도의 세계화를 문제시하지만, 세계화를 '중국의 부상'을 위해 적극 이용함으로써, 장차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주도세력으로 발전하려는 비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접근에 대해 E. Medeiros and M. Fravel(2003)는 '중국의 신외교(China's New Diplomacy)'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최근 중국의 외교행위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로서 중국이 국제관계 무대<sup>36)</sup>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 향상된 역량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여 상당히 탄력적이며 정교한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제제도와 국제규범·기준을 자국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쓰고 있는 것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박

34) KOTRA(동북아팀), "한국,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전망-우리의 대중 수출 현황 및 증가요인 분석", 「기획조사 06-011」, 2006.3, pp.19-22.

35)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중국경제연보", 「연구보고서」, 종합심층연구, 2003.12, pp.130-131.

36) 쌍무관계, 다자기구, 다양한 무역협정과 안보협정, 지구촌안보문제 등.

두복(2003)은 최근 중국의 외교전략은 종래의 수세적·피동적 자세로부터 가능한 한책임과 역할을 적극 모색하는 「有所作爲」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다.<sup>37)</sup>

최근 중국이 '지역주의'라는 또 하나의 시대적 흐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상술한 외교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최근 중국의 지역경제통합 추진전략은 피동적이던 데서 주동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D. Hale and L. Hale(2003)은 중국이 경제자유화전략과 동아시아지역 리더로의 부상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역내 FTA등 지역협력 추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1997년부터 출범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ASEAN+3 메커니즘의 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ASEAN+1 메커니즘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ASEAN과 '선심성' (자국에 상대적으로 덜 유리하게)의 先자유화조치(EHP)에 합의하면서까지<sup>38)</sup> ASEAN과의 지역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동아시아에서 지역경제통합운동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장차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東亞主義」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다만의 李英明(2001)은 탈냉전시기에 동아시아에는 몇 개의 지역주의세력이 서로 견제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亞太主義」, ASEAN 10국이 형성한 「ASEAN주의」(ASEAN-ism), 일본과 중국이 각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아주의가 병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39)</sup>

---

37) 宋群, "東亞經濟合作의 新發展和 中國의 對外政策參考", 『經濟研究參考』(격주간), 베이징, 제4기(총1772기), 2004. pp.12-13.

38) 중국은 2002년11월ASEAN 10개국 중 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4개국과260여개 농산물 관세를 2004년부터 철폐하는 '先자유화조치'(EHP)에 합의했는데, 이 4개국이 모두 전통적인 농업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치는 중국 측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2003년6월에 중국은 태국과 188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2003년 10월부터 先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39) 楊聖明, 「服務貿易領域 新進展」, 『中國對外經濟理論前延』, 베이징,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3, pp.56-58.

나. 최근 중국의 FTA 추진동향<sup>40)</sup>

<표 3-15>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대상국	상태	협상과정 및최근 상황
홍콩	기체결(CEPA)	경제긴밀화협정(2003.6.29)
마카오	기체결(CEPA)	경제긴밀화협정(2003.12.20)
아세안	기체결(FTA)	FTA 상품협상 최종 타결(2004.11) 상품분야 FTA발효 (2005.7)
칠레	협상 중(FTA)	5차 협상(2005.11)에서 타결전망
호주	협상 중(FTA)	2차 협상(2005.8)
뉴질랜드	협상 중(FTA)	4차 협상(2005.7)
GCC*	협상 중(FTA)	2차 협상(2005.6)
파키스탄	협상 중(FTA)	1차 협상(2005.8)
남아공	협상 예정(FTA)	2004년 6월 FTA협상 개최에 합의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도 FTA추진
인도	공동연구(CECA)	2004년 공동연구 추진
아이슬란드	공동연구(FTA)	2005년 5월 양국정상 공동연구 합의
한국	공동연구	한중 FTA 공동연구
한국 일본	공동연구	한중일 3국 FTA 공동연구

주: \* 걸프협력회의회 (Gulf Cooperation Council)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2006

중국의 FTA 추진 행보는 최근 들어 점차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4년 11월 29일에는 ASEAN과 관세인하협약에 서명함으로써 2010년까지 협정안에 맞추어 관세를 인하 및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이 FTA추진에 진입했으며, 칠레 뉴질랜드와의 FTA협상에서 각각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 협력회의)와도 FTA협상 방법, 범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sup>41)</sup>

40)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 중국경제연보", 「연구보고서」, 종합심층연구, 2004.12.30, pp.140-143.

(1). 중국·ASEAN

2004년11월 29일 중국은 ASEAN과 관세인하협약에 서명함으로써 FTA 형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FTA 추진공식 합의과정에서 ASEAN 10개 회원국은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를 인정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2005년부터 농산물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단계적 관세 인하를 시작으로 2010년 관세철폐 완료시점까지 본격적으로 중국·ASEAN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2010년까지는 ASEAN 6개 선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과 2015년까지는 4개 후발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들과 자유무역지대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표 3-16> 중국·ASEAN 관세율 인하일정(6개 선발국 기준)

(단위:%)

X=MFN rate	특혜관세율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 \leq X$	20	12	5	0
$15 \leq X < 20$	15	8	5	0
$10 \leq X < 15$	10	8	5	0
$5 < X < 10$	5	5	0	0
$X \leq$	현행		0	0

주: 특혜관세율은 2003년7월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함. 2005년 관세율 인하는 동년7월1일 개시하고, 2007년, 2009년,2010년, 인하는 동년1월부터 시행함.

자료: JETRO (일본무역진흥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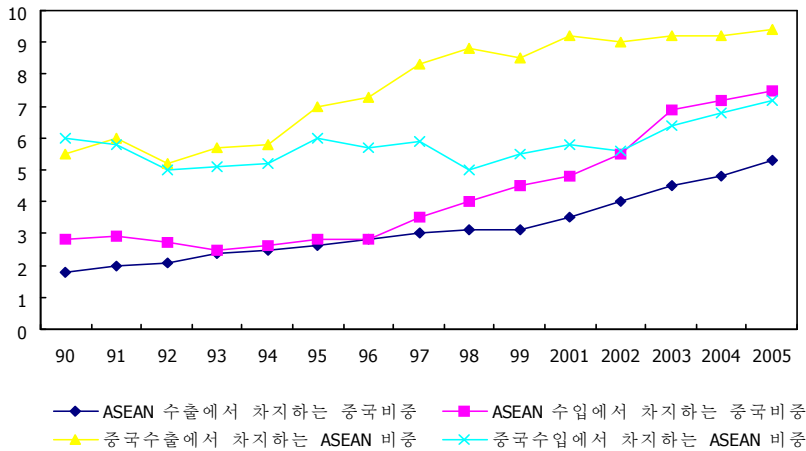
41) 박변순, 유진석, 김현진, "중국경제 연착륙할 것인가", 「연구보고서 522호」, 삼성경제연구소, 2005.10.12, pp12-13.

<표3-17> ASEAN의 FTA 추진 현황

대상 지역	추진 상황
· 중국 ⇔ ASEAN · 일본 ⇔ ASEAN · 韓 · 日 · 中 ⇔ ASEAN	· 2015년까지 FTA체결 목표 · ASEAN 10개국과 개별적인 협력관계를 계획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창설의 중장기 과제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월보, 2004. 참조.

[그림 3-7] 중국과 ASEAN 간의 무역구조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월보』, 2003. 중국 상무부 "중국해관통계보고서", 2006.5.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가 작성.

(2). 중국·칠레

2004년11월18일 라고스(Ricardo Lagos)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FTA 체결을 위한 공시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은 중남미국가와는 최초로 칠레와 FTA협상을 개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대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sup>42)</sup>

중국·칠레는 양국간 FTA의 타당성 연구에서는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은 칠레의 자원과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칠레는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중국·뉴질랜드

2004년 11월 19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헬렌 클락(Helen Clark) 뉴질랜드 총리는 칠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FTA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양국간 FTA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는 양국이 FTA를 통해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양국 경제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동 보고서는 양국간 FTA 체결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무역자유화로 인한 생산자 조정비용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협상에서도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4). 중국·GCC

2004년 7월 중국은 GCC 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들과 경제,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서명, FTA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이후 2004년 11월 23일에는 중국·GCC FTA 협상 방법 범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동 FTA가 체결될 경우 ASEAN에 이어 두 번째 지역연합체와의 FTA가 될 것이다. 동 지역과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은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43)</sup>

---

42) 배궁차, "중국의 對ASEAN 접근강근강화 동향 및 전망", 「연구보고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8.23, p34.

43) 정인교 外,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FTA협동연구시리즈03-02」, 서울 KIEP 경제사외연구회 소관기관, 2003, pp.474-477.



## 2. 한국의 FTA 추진 내용<sup>44)</sup>

한국은 칠레와는 FTA가 발효 중에 있고 앞에 설명한대로 싱가포르와 2004년 11월에 체결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한국과 주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무더기로 체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통상 교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중 7개 FTA 협상대상 22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2004년12월 12일 외교 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중 일본과 FTA 체결을 목표로 최종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양국간 FTA가 타결되면 두 나라 산업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산품 및 농림수산물 분야의 개방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차이가 커 최종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연합(ASEAN)과 2006년 말까지 FTA를 체결 한다는 목표아래 2005년부터 본협상을 시작하다. 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EFTA)과도 2005년1월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FT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갖기로 했다. 멕시코, 인도, 남미, MERCOSUR 등과는 내년 중 FTA 본 협상을 위한 사전단계인 공동연구를 벌일 예정이다.

FTA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sup>45)</sup> 하지만 협정이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거나 국내법령에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하양을 위임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사항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FTA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절차법을 마련할 필요성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FTA 초기 도입단계에 있는 국가는 기존의 관세제도와 상이한 새로운 제도와 절

---

44) 송창의,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46-51.

45)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차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내법령 체계를 맞추지 아니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오류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FTA 시행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협정과 국내법령 체계의 조화를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서는 국내법령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표 3-18>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구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향후계획
협정 발효	칠레	2004년4월 FTA 발효	-
협상 타결	싱가포르	2005년8월4일 서명	2005년12월1일 국회비준 가서명(9월3일),본서명(12 월중),2006 하반기 발효
	EFTA	2005년7월12일 타결	
	아세안	2005년11월29일 상품분야 주요내용 타결	2006년 하반기 발효 추진
협상 진행	일본	6차협상 완료	6차(2004년11월)이후 교착상태
	캐나다	3차협상 완료	2006년 상반기 협상타결 추진
공동 연구	미국	3차연구 완료 (공동연구 종료)	빠른 시일내 협상 개시
	멕시코	6차연구 완료 (공동연구 종료)	2006년1월~2월경 협상 개시
	MERCOSUR	2차연구 완료	206년말 또는 2007년초 3차연구 예정
	인도	3차연구 완료	2006년 12월 4차연구 예정
민간 연구	중국	2005년공동연구 개시	향후 2년간 공동연구
	한 중 일	2003년공동연구개시	
	3국간 FTA	(중국측 제외)	2005년 연구완료

자료: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2006.

(<http://www.kiep.go.kr>)

입법상식과 관련, 2004년 4월 1일 부터시행하고 있는 한·칠 FTA 관세특

례법<sup>46)</sup>과같이 개별 FTA마다 이행특례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 및 지역공동체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어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이에 따른 입법을 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한국은 한·칠 FTA(2004.4.1 발효)를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한·싱 FTA와 한·EFTA FTA가 체결되었고 2006년 상반기 중 한·아세안 FTA 및 한·캐나다 FTA가 체결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멕시코·인도·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곧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며(<표 3-18>참조), 앞으로 최대 50여 개국과 FTA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sup>47)</sup>

한·싱가포르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 11월 타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2005년 8월 양국 장관간 서명되었으며, 2005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 1/4분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한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되어, 양국간 교역이 상당폭 증가하고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협상은 2005년 1월에 개시, 7개월만에 타결되어 2005년 12월에 서명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제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과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

---

46)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4.3.5법률 제172호)

47) 외교부, 「2005년 업무계획」, (<http://www.fta.go.kr>)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2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2005년 12월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하였고,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경우, 수입액 기준 97% 자유화(90%는 관세철폐, 7%는 0~5%까지 관세감축)에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중국보다 3년이나 늦게 협상을 개시하고도 중국과 동일하게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에 합의하여 한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선점의 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상품분야 잔여협상 및 서비스·투자협상이 타결되어 한-ASEAN FTA가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허브(Hub)로 부상하게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와는 2005년 1월 및 3월 두차례의 사전협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7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FTA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3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어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 세부 분야별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멕시코와는 6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마치고, 2005년 9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습니다.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당초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측의 전향적인 농수산물 분야의 양허제시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 시장 진출확대 등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이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초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005년 5월 및 8월 공동연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가 체결될 때마다 개별적인 이행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적·행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협정발효를 지연시키며 국내법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경제의 달성과 신속·간편한 협정발효를 위하여 기본방법 방식의 일반적 관세특례법의 제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이해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FTA의 신속한 발효가 가능하다. 이외에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통관 및 대국민 납세편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제4장 한국·중국 FTA 체결의 문제점 및 추진전략

### 제1절 한·중 FTA 체결의 문제점

한·중 FTA 체결은 무역 및 투자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농업부문처럼 업종에 따라 손실을 입는 계층이 있을 수 있다.

FTA 체결 자체가 체약국간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국내 생산 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물론 한·중 양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종속적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

할 수 있다고 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8)</sup>

### 1. 경제적 조건의 차이<sup>49)</sup>

1987년 출범한 EC의 초기 회원국인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의 경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1989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한 당시에도 양국은 동일한 경제수준에 있었다. 1950년대나 1980년대의 경제개방 정도는 현재와 비교하여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상에서 언급한 국가들간의 개방 정도가 크게 차이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EU나 NAFTA의 출발은 경제규모나 수준 그리고 개방의 정도에서 서로 비슷한 위치의 국가들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4-1> 한·중의 경제규모

구분	한국			중국		
	1990	2000	2005	1990	2000	2005
GDP(억 달러)	2,525	4,617	7,220	3,877	10,800	14,690
1인당GDP(달러)	5,883	9,822	14,143	370	852	6,200
수출액(억 달러)	687.12	1,722	1,488	627.60	2,494	7,620
수입액(억 달러)	744.05	1,605	2,611	538.09	2,251	6,601
FDI 유치액 (억 달러)	78.85	92.834	76.8		420.90	622.4

자료: 신태용외,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시장 활용방안」. 2001.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중국 상무부, 2006.3.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가 작성.

48) 김형진,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전망: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51.

49) 김정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56-57.

그러나 한·중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중 FTA를 비롯한 동북아 경제통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4-1>에서 우선 GDP규모를 2005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7,220달러와 1조 469억 달러에 달하는 약 3배정도의 규모이다. 그러나 1인당 GDP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이 14,14달러에 이르고 중국은 6,20달러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즉 인구 13억 명의 중국은 전체 경제규모는 클지언정 개개인의 생활수준이 한국에 비해 월등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발전단계가 아직 한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경제수준의 차이는 한·중 경제통합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각국이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해도 상황은 별로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한 지역에서 경제권을 형성하거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지리적 인접성, 정치제도 및 정책방향의 일치성, 국가의 규모, 인구의 크기,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력의 유사성이 존재 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경제통합의 일반적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공동경제권을 형성하기에는 국가의 규모, 경제발전의 정도, 인구분포 등의 격차가 너무 크며,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 국가 간의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력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함으로써 경제권 형성의 이익이 역내 기술이 앞선 나라로 집중되거나 역내 경제교류가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공업부문에서의 발전 및 경쟁력의 격차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역내제국간 생산구조 및 시장수요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역내국가간의 경제력 격차가 산업구조의 이질성에 시인한다면 상호보완적 결합 메카니즘을 통해 동태적으로 개선 할 수 있으나, 동일산업 내에서 구

조적 경쟁력의 격차가 커서, 역내 제국간 생산구조 및 시장수요에 있어서 비대칭적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상의 비대칭성이 지역 규모의 상호의존적 경제권 형성의 주요한 기능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이고 국지적인 경제권 형성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 2. 산업발생의 고착화<sup>50)</sup>

양국간의 산업발전의 격차로 인한 산업발생 고착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현시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진 저차원산업에 대한 고착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무역불균형과 함께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무역수지의 편중이 거론되어 한국의 경우 무역수지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자 중국의 경우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각국 산업에 대한 체질변화를 발생시켜 오히려 산업기술에 대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동태적 효과로 볼 때 외국인 기업들의 역내진입과 역내교역 증가로 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 3. 경제체제의 이질성

사회주의 계획경제권과 자본주의 시장경제권간의 경제협력체 형성은 양체제가 추구하는 경제이념 및 경제운영원리의 근본적 차이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경제권의 대외무역은 이윤추구를

---

50) 김형진,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전망: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52-53.



목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해 실행되며, 계획경제권의 대외 무역은 국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조달의 일환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결속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시장경제권의 경제활동은 시장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기별이윤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자생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국가간의 경제권 형성은 이러한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앙계획형 계획경제권에서는 이러한 확산이 인위적으로 통제됨으로써 경제권 형성의 근본취지가 무실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직까지 한·중 양국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경제운영체제의 차이는 한·중 지역경제권 구상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 지역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WTO 가입을 위한 ASEAN으로부터의 지지 확보 외에 일본에 의한 동아시아지역의 통합 논의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력에 뒷받침하는 영향력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과의 FTA를 우선 적극 추진중이 터라 이에 중국도 한국과의 FTA협상을 고려중이다.<sup>51)</sup> 한국도 나름대로 지역주의의 수용의사를 밝히고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도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즉 중국과 한국간 FTA가 조기에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동아시아의 지역 경제통합에서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논의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향후 동북아 및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51) 중국은 일본이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한 데 이어 한국과의 FTA 논의에 상당한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주목하였음.

#### 4. 남북한 대결구도<sup>52)</sup>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비경제적인 요인 가운데 빼놓을수 없는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남북한간의 대결구도이다. 이는 남북한 두 당사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둘러싼 주변 관련국(특히 중국) 전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며,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변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 를 논의하는데 있어, 남북한의 대결상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FTA 논의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안위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대결구도를 종식하고 통일은 어려울 지라도 상호 평화를 보장하며 경제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이 함께 발전해 나간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변영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훨씬 자유로운 위치에서 한·중 FTA 를 보다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와 같은 시나리오는 한국의 희망 섞인 바람일 뿐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질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체제가 붕괴되어 냉전체제가 종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더욱 정당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의 동의 없이 한·중, 한·일, 한·중·일 FTA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문제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52) 김정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58-59.

장 큰 연결고리이며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 한·중은 물론 동북아 경제통합은 그 만큼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 5. 한·중 양국간 무역불균형 심화

한·중을 가리켜 유교문화권 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으나 동양적 가치관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유교적 전통에 대해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한·중 간에는 역사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문화적 유산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지 는 알 수 없다. 과거의 폐쇄적인 사회상을 감안할 때 당시의 사회적 교류는 오히려 일부계층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 반계층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53)</sup>

물론 서구사회의 경우에도 일반계층의 교류가 오늘날과 같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적 국가체제가 확립되고 교통·통신수단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된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 계층간의 상호 교류가 증대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깊어지면서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기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국가들간 사회·경제적 통합은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EU가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와 행정분야에까지 통합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일반계층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가진 유럽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냉전체제는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간의 외교관계 수립도 상당기간

---

53) 물론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으로 동일문자를 쓰기는 하지만 발음이 전혀 다르며, 특히 중국에서 간자가 사용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문자를 중국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을 돕는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시켰으며 이 때문에 일반계층의 교류는 더더욱 힘들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북한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한·중 일반계층의 교류가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된 것은 불과 10년 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 사이의 일반교류 역사는 극히 짧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간 무역은 종속적인 경제구조와 산업·기술협력의 부진 등으로 구조적 불균형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경공업부문의 공업화 초기 단계에서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입함에 따른 대한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중국은 순차적으로 동일한 산업발전 패턴을 보이면서 공업화를 추진 해왔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섬유산업에서, 1980년대 이후 전자, 자동차 등을 육성하였고, 중국은 1980년대 섬유산업에서, 1990년대 전자,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기술발전 속도가 완만해지고 한국의 산업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한·중의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상태가 되었다. 21세기 세계경제는 정보화, 서비스화 시대로 점차 전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한·중의 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에 치중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양국 모두가 중장기적으로 교역조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성사에는 이 같은 구조적 무역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 제2절 한·중 FTA 추진전략

한·일 FTA 추진이 2003년에 이미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공식협상을 개시한 데 비해, 한·중 FTA 논의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한·중·일 FTA 공동연구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양국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양국이 진행 중인 여타 FTA협상 일정 때문에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민간차원의 한·중 FTA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연구가 다음 단계에는 정부차원의 산관학 공동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 동안에 한·중 FTA의 장애요인들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환경조성은 FTA 추진의 장애요인을 완화하고 양국의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깊이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양국의 이해가 걸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상호간의 깊은 이해에 기반한 신뢰형성(trust building)과 각종 불확실성의 제거가 중요한 과제이다.<sup>54)</sup>

## 1. 산업부문별 추진전략

### 가. 제조업부문

제조업 6개 산업의 민간품목 분석에서 밝혀진 것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주요 산업은 중국의 강한 가격경쟁력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기술 차별화가 심한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에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은 각 산업의 발전단계, 기술 및 경쟁력 수준, 수출입 상황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설정이 쉽지 않다. 또한 대중 전략도 상반되는 성격을 지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대응방향은 결국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국간

54) 남영숙, 이창수, 지만수,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연구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2003, p.140.

및 여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한국 제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최근의 한·중 관계, 그리고 산업고도화과정에서 한국제조업이 겪은 경험과 겪고 있는 현실은 이에 대한 해답의 대부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중국을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지과 시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중국의 산업고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중국은 한·중 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특히 섬유산업의 의류부문은 국제경쟁력 약화로 노후설비 폐기, 해외이전,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조립공정이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주로 관련부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산업고도화 속도로 볼 때 이러한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산업의 발전과정과 한·중관계의 진전속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부품·소재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기술도입과 외국인투자 유치, 사양산업과 중복투자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이전, 새로운 상품·공정 및 디자인 개발,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한국 제조업이 상당한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미래에 대항 산업이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한·중 양국 경제의 빠른 통합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한국 제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책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의 시장통합으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므로, 동 FTA를 정책 실천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산업별로 좀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55)

---

55) 이창제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정책연구0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4, pp.144-146.

먼저 한·중간 상호 무역과 시장접근을 더욱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 및 규제 전달경로의 신속화, 통관·검사·검역제도에 관한 훈련시스템 구축, 무역마찰 조시경보 시스템을 창설·운영, 민간사업자의 이동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조정과 관련하여 일반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은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한 외국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한 업종 전문화, 대기업과 하청기업과의 협조시스템 구축에 있다. 일반기계산업의 경우 그동안 기술 도입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FTA의 대안으로 기계류에 대해서만이라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역내 기준·인증제도를 정비하는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한·중간의 FTA체결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가급적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기계 산업에 대한 미미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투자촉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투자제약요인을 발굴·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체결 전에 양국간의 부품의 호환성 제고와 공용화를 위한 협력을 통해 제품 차별화 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자동차품목을 살펴보면, 중국은 WTO 가입으로 각종 장벽이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 규모는 2003년에 400만대, 2005년에 530만대, 2010년에 700~800만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56)</sup>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중국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일본의 활발한 중국 진출 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 FTA시 자동차분야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일본과 중국 위주의 협력관계가 전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 및 기업은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양국간 산업협력 기반의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

56) 산업자원부, "한·중 기술경쟁력 연구-중소형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연구보고서」, 2003, pp.89-90.

부품의 공통화, 표준화, 모듈화 추진, 양국간 부품구매 네트워크 통합추진과 품질 인증제도의 표준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외자계 기업을 축으로 한 전략적 제휴 추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한국의 코어 컴피턴스 배양·강화, 산업구조 조정 및 퇴출을 대비한 부품기업의 대형화·전문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산·관·학 공동대책반 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동차분야는 각국의 중요 기간산업으로서 특히 중국의 여건 미비로 인해 시간이 결릴 것으로 생각 되며, 설사 교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외품목으로 지정되거나 관세 철폐 유예기간이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부문을 살펴보면, 첫째, 글로벌 차원의 방향정립과 양국공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기본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자산업의 영역 확대 및 국제적 기술력 경쟁 때문에 특정 국가와의 협력만으로는 전자산업의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우므로 세계 전자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표준화 등 협력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이전이나 공동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 최소한 협력확대로 한국의 입지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은 피해 WIN-WIN 전략을 수립 하여야 한다.

셋째, 양국의 협력체제 구축시 국별, 산업별, 주요 품목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포괄적 협력방향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여타 산업보다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산업분야에서 우선적으로 FTA에 준하는 포괄적 협력과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거나 기술력 열세를 면하지 못하는 품목 등은 일정한 보호책 마련과 함께 FTA에 따른 이익이 상호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시나리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각 부문 주요 업종별로 나타날 효과와 사계연구 및 관련업계의 제안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적 · 장기적 전략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 나가



야 한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는 물론 중국의 전략과 대응시스템에 걸맞는 추진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철강산업을 살펴보면, 국내 철강산업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수강 및 전기로업계의 열위 등 업종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업종간 전문화·계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설비의 폐기 및 해외매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국내 철강산업은 높은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향후 저성장시대 도래에 따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한·중 철강업계간 산업협력을 전략적으로 MIX 시키면서 강화해 나가는 것 또한 FTA 시대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철강산업은 상당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체결 이전에 상호 기술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철강산업은 경쟁과 협력의 비중이 높아질 것인바 품목, 경쟁상황, 협력의 목적 등에 따라 한·중연합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산업은 석유화학의 수급상황, 기술수준, 발전단계 등에서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강해 상호간 분업관계 구축을 통해 시장여건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양국간 상호 투자와 기술협력,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공급과잉 해소, 구조조정 촉진, 규모의 경쟁력 제고 등을 실현한다면 이러한 시너지 효과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sup>57)</sup>

## 나. 농수산부문

---

57) 김정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64-67.

## (1). 농업

이론적 고찰 및 NAFTA 10년의 경험을 고려할 때 결국 FTA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무역변화를 초래한다. 한편으로는 비교우위 또는 경쟁력을 반영하여 특화가 전개되며, 다른 한 편으로는 회원국간 무역량 자체가 증가하는데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전자를 압도하게 된다.

무역패턴 변화에 따라 특화가 전개될 경우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품목의 국내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경쟁력 없는 취약품목은 수입수요 급증에 따라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화전개를 상정할 때 농업부문 대응전략으로 한·중 FTA 체결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에서 예외품목화하는 전략으로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겠다. 한·중 FTA 체결 이후에는 한·중 FTA로 타격을 받은 취약산업을 보상해주는 대책을 상구하면 될 것이다. 또한 동태적 경쟁력을 갖는 품목군(예를 들면 김치 등 가공식품, 원료·종자산업, 인삼 등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동 품목군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부문에서 확대된 기장접근 기회를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중 양자간 FTA가 출범할 경우 농업분야의 과제는 양국의 농업이 지역통합 이후에도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역외국 농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농업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 한국보다 농업경쟁력이 높은 중국도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역외국들에 비해 토지집약적인 품목의 경쟁력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가소득이 상승 할 경우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경쟁력마저 상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업생산과 농산물 교역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은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Division of Labor)과 역내 교역 전환(Regional Trade Division) 및 역내 교역창출(Regional Trade Creation)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한·중 상호 경쟁적인 품목의 교역을 내부화(Internalise)하는 방식으로 역내 농산물 교역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이 쌀과 채소, 과일 등 경쟁적 품목의 자급률은 일정한 수준만큼 유지하는 대신 옥수수과 대두 등 보완적 품목의 수입선을 역내국인 중국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sup>58)</sup>

한·중 양국은 농산물 교역의 역내 시장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합되는 품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농업분야의 산업내 무역은 가공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의 산업내 무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국별 수출 경합도를 의미하는 농산물의 수출유사성지수가 높다는 사실은 향후 고급화와 기능성 농산물 개발 등 제품차별화(Products Differentiation)를 통할 경우 경합품목의 산업내 무역을 가능케하는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농산물의 산업내 분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국간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소득수준의 차이가 커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수준의 격차도 심한 편이다. 따라서 역내국별 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과 기술이전 및 농산물 품목별 생산문담 등 다각적인 농업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산업내 분업 체계를 구축할 경우 가공농산물은 물론 신선 농산물 분야에서도 농산물의 산업내 무역을 통한 교역창출과 교역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수산업

한·중 양국은 현재까지 자국 수산업의 민감성을 이유로 수산물 수입을 제약하는 많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중 FTA가 시행되어 무역장벽이 제거될 경우 양국 수산부문의 생산 소비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받아

---

58) 김정호·정정길, "한국의 농업기술 발전과 대중국 협력 가능성", 『한국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p.233.

대내외적으로 대폭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양허에 대한 신중한 접근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협상구조 속에서, 국내 수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양허품목비율을 조정하고 민감품목의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수입증대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 즉 민감성이 큰 부문의 개방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WTO DDA 및 여타 FTA에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되, 기본적으로는 WTO 협상과 여타 FTA에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시장개방 혹은 무역보호의 논리와 수준 등이 한·중 FTA 협상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수산업의 경우, 구조적 취약성과 개방에 따른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논리가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수산업 부문의 추진전략은 생산과 교역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생산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수산업 생산량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내 경제발전과 더불어 수산물 소비의 증가는 전통적인 내수면 어업생산 뿐만 아니라 해면 어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둘째, 다른 1차산업인 농·임·축산업 종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얻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따라서 수산물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sup>59)</sup>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첫째, 그동안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정책전환과 이를 위해 바다목장화사업 및 간척사업들을 시행하고

---

59) 한국의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는 첫째, 연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원감소 둘째, 어민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자원감소, 셋째, 최근 대규모의 중국어선의 한국국내 수역에서의 불법어로 인한 자원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있으나 그 효과는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회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향후 한·중 FTA에 대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산물 수출입에 있어 한국은 2001년을 기점으로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수산물 수급에서 차지하는 수입 수산물의 비율은 약 36% 정도로 그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향후 한·중 FTA체결로 인한 중국산 수산물의 급격한 증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수산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의 증가가 식품안전에 있어 큰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sup>60)</sup>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안전조치로는 원산지 표시제나 위생관리의 강화 및 시장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국민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협정 체결은 관세 철폐 또는 인하로 인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가져와 한국 국내 수산물 생산어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동안 한·칠레 FTA가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농업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인 충격완화 장치의 부재에 있다 하겠다. 사후 FTA 체결로 수산업을 비롯한 1차산업에 대한 피해대책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구조조정 및 침체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 야만 수산업 종사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생산어사에 대한 보상과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수산정책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sup>61)</sup>

---

60) 주문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2003, pp.56-57.

61)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3국 기업의 FTA대응전략", 『중국경제현안브리핑 04-12호』, 북경사무소, 2004, p.2.

### (3). 금융서비스부문별 추진전략

지역적 FTA는 포괄적 FTA로서, 대체로 서비스 자유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의 자유화는 시장의 개방, 민영화와 경쟁의 도입을 의미한다. 상품무역과는 달리 서비스의 경우 지역협력을 통하여 무역전환을 일으키지 않고 다자협상보다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유사한 국가집단간에 국내규제 측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인정 및 조화의 형태로 실질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자문화권, 비교적 유사성을 지닌 한·중간 지역협력은 범세계적인 접근보다 서비스 자유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62)</sup>

서비스의 보호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축소시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사격을 상승시킨다. 특정 서비스 부문 보호로 상승된 서비스 가격은 중간 투입요소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여 타국의 수출품 및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관련 상품 혹은 서비스에 조세로 작용한다. 한·중 FTA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생산자서비스를 발전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OECD는 서비스가 가져오는 신규 고용기회 창출, 혁신 및 생산성 촉진 및 서비스무역과 투자 증진에 주목하여 회원국이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일방적 혹은 다자적으로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sup>63)</sup>

금융서비스 서비스의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한·중 FTA는 기본적으로 GATS의 금융서비스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FTA의 전문에 금융서비스를 독립된 장(Chapter)으로 구성하고, 금융부속서와 실행협정을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GATS 형태의 채택은 우선 일본·싱가포르간 FTA의 체제와 유사하여 일본

---

62) OECD(2005a), "South South Services Trade: A scoping Paper", TD/TC/WP, 2005.20, pp.3-4.

63) OECD(2005b), "Enhancing Services Sector Performance", DSTI/STP/ICCP, 2005.2, p.3.

의 경우에서는 추가검토의 비용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도 다자간 협상이 경험을 통해 그 동안 익숙한 체제라는 장점이 있다. 금융서비스의 전문(Chapter)에서는 금융서비스무문의 주요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FTA협정에서 금융서비스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금융서비스부문에서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재언급해 향후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 자유화의 기재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는 경우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도 GATS 형태와 같이 열거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 한·중간의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감독체제의 상이성에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의 정의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금융서비스는 제공기관에 따라 설립요건 및 영업범위, 그리고 감독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즉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의 실제기능보다는 금융기관 자체의 고유업무에 따라 감독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WTO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가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에 합치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양허안의 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의 금융서비스 협상에서는 보다 정확히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정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경간 거래의 허용여부는 한·중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중요한 협상대상이다. 한국은 국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의 건전성 그리고 국내 금융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자본 이동이 수반된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금융 자유화 및 IT 기술의 발달에 기인하여 금융서비스의 국제적인 국경간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도매 금융업분만 아니라 소매 금융업에서도 국경간 공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선진국들이 GATS협상을 통해 국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및 소비에 대한 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자간 협상

에서의 국경간 거래 개방 압력을 당분간 수용하기 어렵다면, 한·중 FTA에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한·중 FTA의 금융서비스 조문(Chapter)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쟁해결규정을 삽입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TA의 분쟁해결기구의 주요 체제를 인정하면서, 특히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국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분쟁해결 위원회의 설정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한·중 FTA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건전성 규제를 채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건전성 규제의 예외조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의 FTA협정은 금융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의 신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조항의 범위는 FTA의 특성상 다양하며 유연하게 설정될 수 있다. 한·중 FTA에서는 양국의 자본시장의 상호 발전을 위해 시장통합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중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협상은 단순히 금융서비스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한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는 소극적인 협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협상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중 금융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서비스 협상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금융서비스 기관은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금융기관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경쟁력이 미흡하고, 전반적으로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는 한·중 금융서비스 교역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한·중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진출을 대폭적으로 활성화 시키거나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합시킨다면, 각국의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본조달 및 운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성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한·중 금융서비스분야의 개방



정도를 감안할 때, FTA 협상에서 양국 모두 WTO 이상의 개방을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한국은 WTO 금융서비스부문에서 최근 OECD 가입조건과 최근 자유화 조치를 반영한다면 국경간 거래를 제외한 부분에서 많은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자유화조치가 필요하지만 한국에 대해 FTA 체결에 따라 차별적인 자유화 조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한·중 FTA에서 WTO+a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WTO 수준에 서만 극단적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을 한정할 경우는 근본적으로 FTA에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 전문(Chapter)이나 부속서(annex)가 필요없을 것이다. 물론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거래 등에서 한국이 WTO에 양호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한·중 FTA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FTA의 새로운 조류에서 나타나듯이 시장통합 및 감독의 조화와 같은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협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sup>64)</sup>

## 2. 정부정책상의 지원전략<sup>65)</sup>

### 가. 한·중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한·중 FTA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협력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건만 조성된다면 언제라도 협력과제를 순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주체가 반드시 정부이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중 FTA 또는 그 이상의 경제통합을 추구하는데 있어 어느 한국

64)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FTA 정책의 기본 방향과 향후 전망", 「KIEP 한·중경제 포럼」, 북경사무소, 2004, pp.2-7.

65) 고희숙,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71-76.

가나 집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급적 모든 국가가 높은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중국과 한국과의 대립관계 등 현실적인 측면으로 볼 때 잠재적인 중국보다는 한국이 FTA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베네룩스 3국 등 소국들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통합을 실현한 지역에 비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통합이 지연된다면 그것은 한국과 한국인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손실이 될 것이다. 경제통합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이를 위한 환경이 서서히 조성되고, 정치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가시적인 진전을 보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무역원활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통관제도의 조화 및 선진화 등 비관세장벽의 개선은 수출입업자 등 상품통관과 관계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과 연계된 문제로서 지역의 경제발전 및 후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역이 확대되면 해당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그밖에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협력방안인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의 조화, 산업구조조정 공조, 에너지·환경협력, 인터넷·정보통신 협력, 남북한 긴장의 완화, 사회·문화교류의 확대 등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인 공통의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국민들은 역내 경제 통합이 특정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FTA의 논의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한국정부는 한·중 FTA를 추진해 감에 있어 그 자체가 대외경제 정책의 최종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세계적 차원의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체제의 완성에 기여하는 비교적 초기 단계의 정책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기반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역내의 높은 무역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역내 무역활성화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자체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일관성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다음 단계 목표는 순차적으로 일본을 포함시키고 AFTA와의 협력으로 가능할 동아시아 FTA의 창설, 그리고 나서 APEC이나 ASEM 혹은 다른 형태의 지역간 경제협력체의 완성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한·중 FTA는 최종 목표인 다자주의체제의 완성뿐만 아니라 그 직후 단계인 동아시아 FTA와 지역간 경제협력체의 건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SEAN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AFTA가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그 후에 한·중 및 한중일 FTA와 연계하여 동아시아 FTA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한·중 FT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그들의 협력 역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sup>66)</sup>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와의 장기계획을 놓고 주변국을 포함시켜 끊임없는 대화와 논의를 유지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장기적으로 돈독히 하도록 해야 한다.

#### 다. FTA 홍보강화

범세계적 지역주의 심화 추세와 그 빠른 확산으로 볼 때 한국이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 정책에 대한 국내적 컨센서스의 획득이 선결요건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FTA 추진을 위해서는 2004년 2월 26일 국회 비준안이 통과된 한·

66) 노재봉, "아시아 경제협력의 전개와 한국의 선택", 『200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경제상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2003, pp.139-140.

칠레 FTA 협정을 비롯한 FTA 정책의 국내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FTA의 필요성 홍보에는 언론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언론인에 대한 FTA 정책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체결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제조업체들도 FTA 추진정책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다. NAFTA 추진시 미국의 구내비준 과정을 살펴보면, FTA 추진에 정부의 대국민 홍보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본격적인 협상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꾸준히 한·중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FTA는 농민의 피해라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FTA하의 무역자유화는 관세 부담없이 수입된 물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값싸고 질 좋은 물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며, 국내 경제체도를 개혁하는 계기로 활용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 라. FTA 전담인력의 보강

FTA 전담인력과 협상조직도 보강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USTR과 같은 KTR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통상조직과 외교조직의 혼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FTA는 중요한 외교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며,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협력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FTA 정책은 성격상, 특히 정치적인 함의가 크며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가미되지 않은 채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FTA 정책은 궁극적인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FT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상교섭 본부내 FTA 전담인력을 확대·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나 한·중·

일 FTA를 포함한 동북아 FTA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통상교섭 본부내 FTA 전담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고, 상대국의 반응을 탐색하며, 협상단계에서는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상대국 입장 및 협상 대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FTA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통상교섭 본부내 FTA 전담인력의 공관근무를 FTA 추진 대상국 위주로 배치할 필요가 있고 산업자원부등 관련부처들은 FTA 전담인력의 육성과 아울러 FTA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라도 추가 배정할 필요가 있다.<sup>67)</sup>

#### 마.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한·중 FTA는 한·칠레 FTA와 달리 패자산업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구조조정과 피해보상은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 농업이 최대의 패자산업이지만 한·중간의 FTA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전자제품 기계산업 등 다양한 계층과 산업이 패자산업이 된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는 한·칠레 FTA와 같이 농업을 위주로 한 특별법 보다는 국내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지원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때, 한·중 FTA 대한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한·중 FTA협상은 국내산업 구조조정정책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과의 FTA는 사실상 한국산업이 필요한 구조조정의 대부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자체제하의 무역 자유화와 연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한·중 FTA 관세양허협상 및 산업구조 조

67) 양평섭, "대중국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계와 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내부 발표자료), 2004.

정 방향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FTA는 칠레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농업부문의 충격이 있을 것이므로 WTO, DDA 농산물 개방과 양자간 농업개방의 큰 틀 속에서 개방에 따르는 국내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보상 수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 할 것이다.<sup>68)</sup> FTA 피해그룹에 대해 '정치적'보상이 아닌 '합리적 차원'의 보상(side pay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보상이라 함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또는 선거시 무마아용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비판그룹에 대한 1조 8000억원을 지원한 것은 정치적 보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합리적 보상이란 국간경제 전체 차원에서 FTA로부터 피해를 볼 내부집단에 대해 그 예상 피해의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방법은 가능하면 간접적이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공동사용시설 제공, 직업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취업기회창출, 사업 및 작목 전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보상의 재원은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

68) 송은희, "동북아 지역협력으로서 한·중·일 FTA모색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2002, p.57.

## 제5장 결론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 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한국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한국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본 논문은 한·중 경제현황과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향후 한·중 FTA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과의 FTA 체결은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의 확보 및 상호간의 통상마찰의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억제 효과의 가져와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여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간 분업구조의 고도화와 대중국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일 FTA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한·중 FTA의 체결은, 한국을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함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내 분업구조의 고도화와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도 기대된다.

그러나 한·중 FTA의 체결은 국내 일부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패자('loser')집단의 강한 반발이 예상

된다. 중국과의 FTA 추진 시 가장 민감한 업종은 농업 및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일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 및 제조업 부문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이며, 한·중 FTA 체결이 농업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국 농산물교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 특히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부 지방은 한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중국의 농업 경쟁력, 특히 가격 경쟁력이 한국의 경쟁력을 크게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무역증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한·중간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교역의 주요 저해요인인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FTA 체결에 따른 무역증대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중국 농업부문의 규모가 워낙 커서 농업개방시 규모의 효과가 한국에 부정적인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조업과는 달리 농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제약 없는 FTA가 될 경우 한국의 일방적인 농산물 수입확대가 발생하여 우리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FTA 추진 시 농업의 완전개방에 집착하는 경우 추진 당사자의 정치적인 부담이 매우 크고 사회보장 성격의 농민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결국 FTA 타결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외 없는 자유화의 원칙을 농업에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한·중 FTA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농업의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한·중 FTA를 추진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방식이 될 것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FTA 추진과정에서 민감품목의 선정과 예외조건의 수준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부문에 있어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내 무역이 진전되어 왔기 때문에, 한·중 FTA의 체결은 중국시장의 접근성 확보와 더불어 기존의 양국간 분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고 산업내 무역의 확산을 통해 한·중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에 비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 자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한국산업구조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한·일 FTA의 체결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 추진은 한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한·중 FTA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한국 제조업 중 중 의류, 피혁, 목재가구, 기타 수송장비 등과 같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의 증가를 의미하며,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 실업의 증가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FTA 추진 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만한 FTA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 중 수직적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이미 대중국 투자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추진 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 체결 후 대중 투자의 확대와 함께 국내 생산을 동시에 확대시키고 FTA를 통한 대중국 투자의 확대가 국내 산업공동화가 아닌 산업고도화의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양국의 경제통상협력이 날이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는 현실은, 한편으

로는 FTA를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FTA에 의한 일부 분야의 부정적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 FTA가 각 산업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민감산업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실제로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FTA 협상에서 특히 한국측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협상의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무역원활화 문제는 양국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나, 중국측은 특히 농수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검역과 통관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측은 공산품 수출입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집중 현상의 개선 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중 FTA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양국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조기 출범시켜서 양국간에 가로놓인 FTA 체결의 장애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상호간에 충분히 조율해 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 가동함으로써 다양한 협력 및 협상의제를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경제협력을 상시적인 정책협조와 산업협력의 수준으로 발전시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 급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FTA 체결을 위한 저변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FTA 체결에는 양국 모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민의 우호적인 정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FTA에 대한 기업 및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중 FTA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이라는 인식이 양국 국민사이에 확산되고, 인근국가들에게까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양국 정부는 한중 FTA가 상생(win-win)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동북아 공동번영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국문 자료]

- 김정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정호·정정길, "한국의 농업기술 발전과 대중국 협력 가능성", 『한국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 김주영, "중국 진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경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수은 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5. 6.
- 김화섭·이석기, "한·중 경제관계의 다양성과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소, 2004.12.
- 김형진,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전망: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고희숙,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남영숙, 이창수, 지만수,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노재봉, "아시아 경제협력의 전개와 한국의 선택", 「200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소관연구기관, 경제사회연구회, 2003.
- 네이버, "한국경제의 현실", 지식iN, 2006.9.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4년 중국경제연보", 중합심층연구, 2004.12.30.
- \_\_\_\_\_, "한·중·일 3국 기업의 FTA대응전략", 「중국경제현안브리핑, 04-12호」, 북경사무소, 2004.

- \_\_\_\_\_, "중국 FTA 정책의 기본 방향과 향후 전망",  
 「KIEP 한·중경제 포럼」, 북경사무소, 2004.
- 동북아팀(KOTRA), "중국경제 2005년 5대 사건과 2006년 5대 과제", 「기획조사05-059」, 2005.12.26.
- \_\_\_\_\_,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전망-우리의 대중 수출 현황 및 증가요인 분석", 「기획조사 06-011」, 2006.3.
- 류길상, 「'뒷걸음질',메이드인 코리아」, 서울신문, 2006.5.8
- 박인선,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번순, 유진석, 김현진, 『중국경제 연착륙할 것인가』,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2005.10.12.
- 배궁차, "중국의 對ASEAN 접근강근강화 동향 및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8
- 산업자원부, "한·중 기술경쟁력 연구-중소형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연구보고서」, 2003.
- 세계무역통계 DB, 대만대륙위원회, 양안경제통계월보, No.151
- 송군, "동아경제합조의 신발전과 중국의 대외정책참고", 『경제연구참고』 (격주간), 베이징, 제4기(총1772기), 2004.
- 송은희, "동북아 지역협력으로서 한·중·일 FTA 모색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2002.
- 송창의,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신태용·이문형·이진면·변창욱,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 산업연구원, 2005.12.
- 양성명, "북무무역지위의 선진전", 『중국대외경무이론전연』, 베이징,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3.
- 양평섭, "급속히 커지는 대중국 무역존도", 『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6.8.17.
- 양평섭, 『대중국 중장기 교역전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서울, 2006.
- \_\_\_\_\_, "대중국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계와 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_\_\_\_\_, "대중국 투자와 무역의 상호 연계성 분석", 『아시아연구』 제7권 2호, 한국아시아학회, 2005.5.
- 양성명, 「복무무역영위의 신진전」, 『중국대외경무이론전연』, 베이징,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3.
- 유자영,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중 FTA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경제통상 통계", 「연구보고서」, 2005.12.
- \_\_\_\_\_, 「2005년 업무계획」.
- 이문형·정만태·김석진,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2005.12.
-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정책연구 0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4.
- 정인교 외,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소관기관 FTA협동연구시리즈03-02」, 경제사회연구회, 서울 KIEP, 2003.
-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12.
- \_\_\_\_\_,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협상현황과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주문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2003.
- 중국대사관, 『중한무역관계소개』, 경제상무참사처, 2006.4.4.
-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수출입 및 고용현황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3.10.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중국 및 미국 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비교분석」, 2005.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 대중국 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2004.

한국은행, "한·중 산업간 경쟁 및 보완관계", 서울 한국은행, 2003.

[외국문 자료]

Asian Wall Street Journal』, 'China Moves Quietly To Push Trade',  
2003.9.15.

『Financial Times』, 'The world must Learn to live with a wide-awake  
China', 2006.11.26.

『Financial Times』, 'Comment&Analysis'[Asia]: 'The march to  
Prosperity: why China can maintain its explosive rate of  
growth for another two decades', 2004.11.9.

『Financial Times』 "Comment&Analysis:Why Europe was the past, the  
US is the present and China-dominated Asia the Future fo the  
global economy," 2003.9.22.

GATT 제24조 제8항

OECD(2005a), "South South Services Trade: A scoping Paper", TD/TC/  
WP, 2005.20.

OECD(2005b), "Enhancing Services Sector Performance", DSTI/STP/  
ICCP, 2005.2.

[Internet Web Site]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go.kr>)

대한민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상해이애셋(ShanghaiAsset Inc) (<http://shanghaiasset.com>)

세계무역통계DB ([www.kita.net](http://www.kita.net))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식정보 (<http://www.ikis.re.kr>)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중국대사관 (<http://kr2.mofcom.gov.cn>)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무역학과	학 번	20057908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채 예	한문: 蔡 藥	영문: Cai Rui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7-10 301호				
연락처	E-MAIL : mail-cherry@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에 관한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Propulsion Direct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    반대(    )**

2007년    2월    일

저작자:            채예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